

#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관련 자료집

1998. 11

농 립 부

# 목 차

1.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기관 통합세부추진방안 .....	3
2. 3개기관 통합에 대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입장 .....	13
3. 시민·환경·사회단체 및 농업인단체 성명서 .....	27
4. 주요 신문사설·칼럼 .....	45
5. 잘못된 광고내용 해명자료 .....	53
6.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관련 일반기사모음 .....	57

여 백

# 1.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기관 통합세부추진방안

여 백

## < 推進經過 >

- IMF 사태이후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 강도높은 구조조정 분위기 확산
- '98.7.3.~8.5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농진공·농조연·농조등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조직 통합방침 확정
  - 7.8 농정개혁위원회에서 3개기관 통합방침 확정
- 7.20. 농업인단체, 학계대표, 공무원, 3개기관 임원등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이후 5차례 전체회의와 3차례 소위원회 개최
- '98. 8.6. 「통합신설조직의 기능과 역할」 토론회 개최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8.19) 및 입법예고 (9.8)
- 9.12~9.13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통합추진위원회 실무작업단 현지 실사

## I. 3개기관 統合의 基本方向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
- ⇒ 「농업기반공사」를 신설, 농업생산기반 확충·관리 및 농촌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 육성

### □ 대등한 조건으로 해체·통합

- 공정한 인사·조직운영을 위하여 통합법률 입법후 3개 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신설공사설립위원회」 구성

### □ 통합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 통합이전 각 기관별로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 비효율제거
-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성

### □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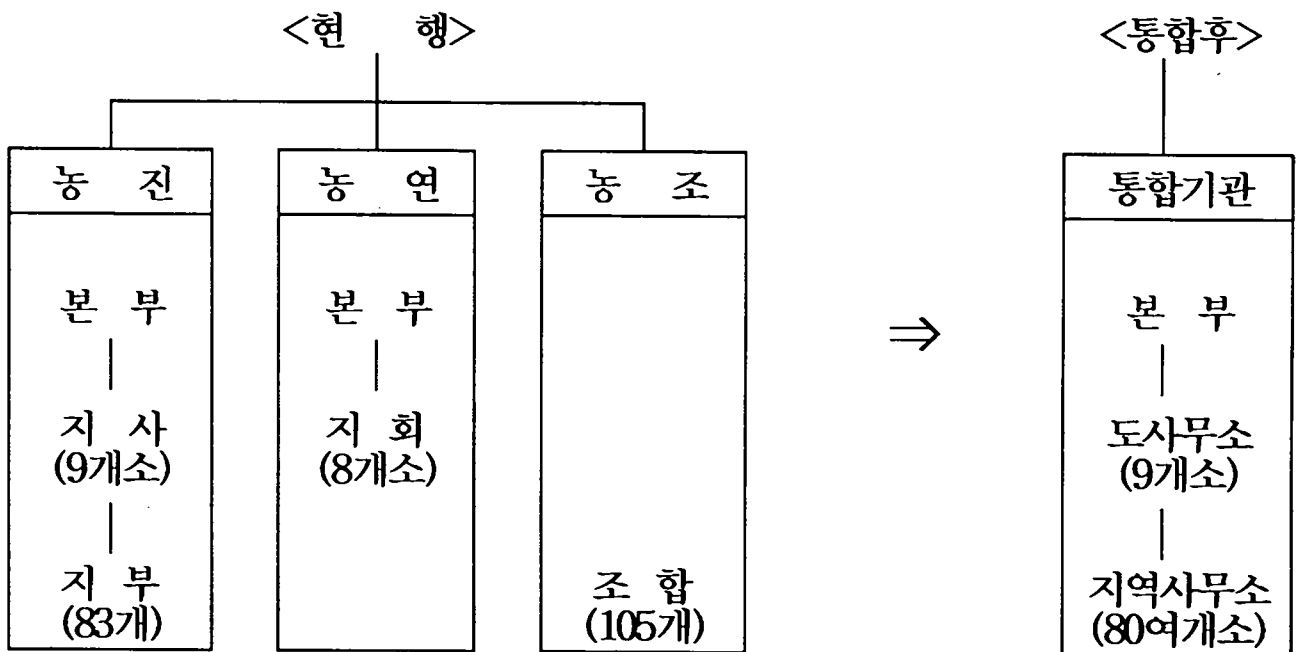
- 통합을 통한 종합체계구축, 전문성 확보로 영농편익 제고
- 인력·경비 절감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농업인에게 환원

## II. 分野別 推進計劃

### 1. 組織

#### □ 3개기관을 통합 공사체제로 일원화

- 본부- 도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업무체계 구축



#### □ 지역·현장중심 조직 운영

- 지역사무소는 수계관리, 지역적 여건, 현행 농조구역을 감안하여 80여개 지역사무소로 광역화
- 농조의 지역적 특성, 물관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지역사무소장은 과반수이상을 현행 농조인력중에서 계약직등으로 임용
- 지역사무소장에게 예산, 인사등 권한을 대폭 위임



## 2. 人 力

### □ 통합전: 각 기관별로 자체 구조조정 실시

- 농진공은 기획예산위의 방침에 따라 감축 ('99말까지 400명)
- 농조, 농조연도 농진공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축
  - 정년 및 직급조정, 직제조정, 관리면적 확대를 통해 조정

	농진공	농 조	농조연	계
현정원	2,478명	4,024	672	7,174
'99년말	2,078	3,332	564	5,974

### □ 통합후: 기구정비등으로 발생하는 초과인력 단계적 조정

- 신설공사설립법에 직원승계조항 명시하여 직원신분 보장
- 통합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중복인력과 설계·공감의 민간이양에 따른 인원조정은 인위적인 인력축소 보다는 신규채용 억제, 업무전환등을 통하여 조정
  - (2000.1) 5,974명 → (2000말) 5,700명 → (2001말) 5,500명
  - ※ 5,500명 = 본부(700)+도사무소(1,400)+지역사무소(3,400)
- 설립위원회에서 3개기관 직원의 직급, 정년, 퇴직금 산정기준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 형평성 유지
  - 3개기관의 보수체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근속년수, 직급별 근무경력등을 토대로 보수체계 조정안을 마련
  - 3개기관의 보직비율도 최대한 균등하게 유지

### 3. 新設公社의 機能

#### □ 농업생산기반 확충·관리 및 농어촌구조개선기능에 중점

- 식량자급기반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조성
  -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농규모적정화사업
- 농업용수의 이용 및 수리시설유지관리
  - 수리시설물의 과학적 체계적관리
  - 농업용수의 오염방지등 종합적 수질관리
-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촌지역종합개발
  -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촌소득원 개발
- 해외농업개발 및 통일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기술개발

#### □ 신설공사기능중 민간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대폭 개방하고 고유기능과 관계없는 사업은 축소·폐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중 경지정리, 배수개선의 설계·감리업무는 민간에게 개방하고 농업용수사업도 민간에 개방
- 저온저장시설등 유통시설운영, 시설농업, 농업인지도사업등은 민간 또는 관련기관 단체에 점진적 이관

#### 4. 農業人 부담과 물관리 서비스

- 농업용수 공급비용부담 (현 조합비)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농업용수공급비용의 일부를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징수
  - 물분쟁 발생 방지등 보완장치 강구
- 물관리는 현행 농조의 물관리 체계를 유지, 농업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지원
- 신설공사는 현 농조구역만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농지개량계 구역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 정부재정부담을 고려, 미흡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한 후 중장기적으로 공사관리구역 편입추진

#### 5. 農業人 參與

- 신설공사 지역사무소에 지역별 농업인 대표자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 자문기구로 운영
  - 수로감시원 추천, 말단 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방안 건의 및 신설공사 사업과 관련된 애로사항 전달
  - 지역사무소장의 임용은 미리“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사장이 추천하고 사장이 임명
- 신설공사의 설립위원회와 이사회에 농업인 대표 참여

## 6. 退職金 支給

### □ 통합이전 자체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소요분

-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영세농조의 경우 우선 감가상각충당금, 재정자립적립금을 전용하고 부족분은 차입하여 지급토록 조치
-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은 신설공사에서 부채로 승계하고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등 별도대책 강구

### □ 통합이후 각 기관의 승계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

- 현 기관에서의 퇴직금을 산출, 신설공사규정에 의한 지급율을 계산하여 승계 조치

## 7. 新設公社의 財政自立

### □ 국가재정상황을 감안 신설공사의 농업기반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재정자립방안 모색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회계는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고에서 지원

### Ⅲ. 向後 推進日程

정기국회에 통합관련법률 제출 (10월중)

법률통과후 「신설공사 설립위원회」 구성 및 설립 사무국 설치운영 ('99년 1.~12월)

○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3개기관 대표, 농업인대표, 학계, 정부등 10인 이내로 구성

○ 주요임무

- 설립절차 확정

- 정관작성 및 인가

- 3개기관 해산등기 및 신설기관 설립등기

- 기타 설립사무국 업무승인

2000.1. 신설공사 발족

## 2. 3개기관 통합에 대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입장

여 백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3기관통합에 대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입장

---

- '98.9.21. 11:00 통합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

< 발 표 배 경 >

- 정부수립이후 역대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시도했으나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반발로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고질적인 병폐와 비능률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농업기반 및 수리분야 개혁을 국민의 정부에서는 농업분야 최대개혁과제의 하나로 개혁작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98. 7.20 발족이래 농업기반 정비관련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3개기관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통합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



- 특히, 원만하고 공정한 통합추진을 위하여 모든 통추위 위원들은 지나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농조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을 담은 3개기관 통합추진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일부 농조의 조합장, 대의원, 노조를 중심으로한 통합반대세력들은 선량한 농민의 입장을 동의없이 사용하여,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출처불명의 자금을 모금해서 신문광고등을 통하여 통추위의 3개기관 통합추진방안을 왜곡하는가 하면,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개혁의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통합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통추위 위원들에 대하여 편협하고 과격한 학자 운운하면서 상식이하의 부도덕한 표현으로 매도하면서 일부 통추위 위원들에 대해서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소위 100만 조합원을 대표한다면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조직을 결성하여 집단행동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 비방광고 사례 >

- 동아일보('98.7.8, 8.27일자, 한국일보(9.18일자) 등

- 더구나 열화와 같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농민단체를 농어촌 진흥공사에 매수당한 것처럼 비방함은 물론 제2건국의 정신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화합과 작은정부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농림부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하여 통합반대의사 표시의 한계를 넘어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용어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범농민단체의 분노를 사고있는 실정임
  
- 이는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정부기관과 양식있는 학자·통추위원들에 대한 중대한 명예 훼손 행위로서 선량한 국민들의 건전한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할 만한 사안임.
  
- 이에 통추위는 통합을 지지하는 대다수 농업인·조합원과 국민, 그리고 봉급과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처우개선을 희망하는 농조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제고, 농민부담경감, 정부비용 절약을 위해 추진하는 3개기관 통합에 대한 통추위 위원들의 견해를 밝히고자 함.

## < 발 표 내 용 >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 조직의 효율성과 농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3개조직은 통합, 공사화하여야 함

- 역대정권에서 지난 50년 동안 쌓여온 고질적인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반발에 부딪쳐 좌절된 농조 등 개혁조치는 이번 국민의 정부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특히 IMF 경제위기를 맞아 사회전분야에 걸쳐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비용절감과 조직의 효율제고를 위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농조는 지난 10년간 총 9,000억원의 정부보조와 조합비(수세) 2,600억원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사업비 등 막대한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현행상태로는 구조적인 운영부실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며 농진공도 공기업 경영혁신차원에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함.
- 농조·농조연·농진공등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 기관의 경우도 기능중복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제거를 통한 예산절감, 대농업인 서비스제고 등을 위해 3기관의 통합이 불가피한 실정임

- 통합의 기본방향은 3개기관을 대등한 조건으로 해체·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가칭)를 신설, 농업생산기반정비·농업용수관리 및 농촌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임
- 신설기관을 공사조직체제로 해야하는 이유는 농업기반시설이 주곡의 안정적 생산, 국가지원의 효율적 관리, 재해방지 등 공익적 기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 현재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농조의 경우 조합체제로서는 자립조합과 영세조합간의 재원이동이 불가능하여 조합간 재정의 불균형, 절대다수 조합의 운영부실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임.

통추위에서는 3개기관이 대등한 조건으로 해체·통합하고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여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원칙하에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함

- 신설공사에서는 현재 농조가 담당하고 있는 물관리의 전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80여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지역사무소장에게 인사·예산권 등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인력등 구조조정은 통합전에 각 기관별로 1차적인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통합이후에는 중복기구정비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인력에 대한 감축을 해 나가되
  - 3개기관의 직원의 직급, 정년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 보수체계 및 보직비율에 있어 기관간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기로 한바 있음
- 현재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조합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농업용수공급비용의 일부를 징수하고
  - 물관리는 현행 농조의 물관리체계를 유지하여 농업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지원함

농조의 자체구조조정안은 일부 조합장과 노조, 대의원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하여 집단이기주의차원에서 나온 비현실적인 방안임

- 현행 105개 조합을 37개로 축소한다고 하고 있으나 과거에도 농조의 개혁방안이 제시될 때 마다 조합장들이 합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득권상실에 따른 반발등으로 이후에는 실천에 옮기지 않는 등의 전례에 비추어 신뢰성을 잃고 있음
  - 현행 농조법에서도 '97.6월까지 40여개의 설립기준미달 조합을 자율합병토록 하였으나 실제 합병한 실적은 1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설령 105개 조합을 37개로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조합은 지소형태로 하부조직을 구성하게 되므로 조직축소의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37개 조합으로의 축소는 그 실현가능성이나 효과가 불투명하며,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을 일단 피해보려는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 분명함
- 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화 한다고 하였으나 선거직 조합장의 특성상 조합장 신분유지를 위한 과다경비가 지출되는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 이는 결국 어떻게든 조합체제를 유지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판단됨

농조의 자체구조조정안에서 자립육성금고를 1조원 조성하여 재정자립을 이룩하고 조합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조합현실을 무시하고 나온 실현이 불가능한 방안임

□ 농조 자체구조조정안에 따르면

- ① 현재의 자립육성금고 보유적립금 2,800억원
  - ② 보상비 3,000억원(600억×5년)
  - ③ 고정불용재산매각 2,000억원(400억×5년)
  - ④ 예산절감, 적립금, 보조지원등 1,500억원 및 기타 연합회 예산절감등 700억원등
- 총 1조원의 농조자립육성금고를 2003년까지 조성하여 재정자립을 이룬다고 하고 있으나

□ 이를 내역별로 분석해 보면

- ① 현보유적립금 2,800억원은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2,500억원이며 이중 농조의 구조조정안대로 800여명을 퇴직시킬 경우 퇴직급여로 700억원이상 지출되어 실제로 적립가능한 재원은 1,700억원임
- ② 보상비를 매년 600억원씩 5년간 3,000억원을 적립한다고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년 발생하는 보상비는 각조합의 운영경비로도 부족하여 현재 경영위기를 맞고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도 보상비에 의한 적립은 불가능함
- ③ 고정불용자산 매각대금으로 매년 400억원씩 5년간 총 2,000억 원을 조성하는 방안중 대지 건물등 400억원은 일부 조합이 통합되더라도 지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각할 재산이 별로 없으며 나머지 불용자산 1,600억원도 ②번 보상비에 포함되어 중복계산되어 있어 별도 조성재원이 될 수 없음

④ 기타 예산절감, 금고운용수익금, 출연금, 보조지원등 2,200억원의 경우에도 현재의 조합 재정상태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혀 현실성이 없음

□ 게다가 현재도 농조의 불용재산 매각분과 1,000억원수준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도 많은 조합이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금적립액이 1억원미만인 조합이 80여개에 달하는등 금고자금마련의 여력이 전혀없고

□ 특히, 실제로 현행 농조법하에서도 자립육성금고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96. 6. 관련법 개정후 지금까지 금고에 출연한 자산은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자금여유가 있는 자립조합의 경우도 조합원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출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 농조 자체구조조정안으로 제시된 재정자립방안은 현행 조합체제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와 같이 현행 조합체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비를 폐지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 농조가 단체의 성격을 조합으로 규정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는대신 조합의 운영을 전적으로 국고보조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조합으로서의 존재가치마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통합반대를 주장하는 일부농조 세력들은 통추위의 통합추진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는 주장임

- 농조측에서는 신설공사에서 조합비대신 농업용수료를 징수하여 농민부담이 증가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 통합되는 신설공사에서는 조합비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상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민부담은 현재보다 대폭 감소될 수 밖에 없음.
- 농조측에서는 신설공사에서 말단수로관리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 지거등 말단수로관리는 현재 농조와 마찬가지로 신설공사에서 관리하되 농진공의 기술과 현행 농조의 지역성과 자율성을 계속 존중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농조의 Know-How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것임
- 신설공사로 통합할 경우에 농업인의 재산을 국유화하여 사유재산권침해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 농조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고지원으로 조성되었고

- 조합원의 농조재산에 관한 권리는 점유권이나 처분권이 아닌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즉 수리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며
  - 현행 농조법에서도 조합재산은 법인인 조합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토록 하고 있으며 해산시에도 개인별 분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조합재산이 공사소유로 이전된다 해도 공사에서 영농목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물 공급서비스를 계속하고, 농업인도 농업기반시설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농업인의 재산권침해는 없음
- 신설조직을 공사화 하는 경우 농업인의 참여가 제한된다고 하고 있으나
-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선거를 통한 대표성보다는 과학성과 전문성에 의한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임
  - 다만,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 선거의 방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신설공사의 지역사무소별로 농업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인력관리, 물관리체계 개선등 모든 분야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공사운영에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할 것임

3개기관의 통합을 대부분의 농업인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통합반대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함

- 현재 20여개의 농조 조합은 직원 봉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황임에도 직원의 보수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조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3개기관의 통합  
방안을 반대하는 것은
  - 조합체제로 이득을 보고 있는 일부 세력의 기득권유지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으며,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과 조합직원들을 무시한 행위임
-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 농조세력들의 신문광고 등을 통한  
주무부 장관과 통합추진위원들에 대한 인신공격행위는  
여론을 호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목적으로 밖에  
볼수 없음.
  - 따라서 통추위는 이들의 돌출행동에 따라 앞으로 발생  
할지 모르는 모든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추궁하고 조치해 나갈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 통추위차원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 3. 시민·환경·사회단체 및 농업인단체 성명서

여 백

## 농진공 · 농조 · 농조연의 즉각통합을 촉구하는 시민-농민단체의 입장

- 농진공 · 농조 · 농조연의 통합반대활동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3개 기관 즉각통합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국사회 전반에는 벌써부터 IMF위기 초래의 교훈을 잊어가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중한 결혼반지까지 아낌없이 빼어 금모으기운동을 벌였던 국민대통합의 정신은 사라지고 IMF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혁작업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

IMF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헌신해온 농민들이 지난 십수년간 간절히 바라고 추진해온, 수세폐지를 위한 '농진공 · 농조 · 농조연의 통합'과제도 마찬가지로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지체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있는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시기,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농진공 · 농조연 · 농조의 통합'을 비롯한 농정개혁과제를 공동으로 합의하여 각후보 진영에게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바 있었다.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농업용수 등 농업생산시설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바 업무중복에 따른 예산낭비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으며, 특히 농조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과도한 수세징수는 수십년간 농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왔다. 방만한 조합운영과 조합장선거와 사업수주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쉬지않고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농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해묵은 폐습이다.

또한 식량자급의 기초가 되는 농업용수의 개발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니며,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농민에게 조합비란 명목의 수세를 징수해온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농지개량조합의 부실경영을 방치할 경우 농지개량조합의 도산은 불을 보듯 명확하고, 그 결과 식량생산기반이 파괴됨으로써 IMF 위기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식량자급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농업의 위기가 남의 문제일 수가 없는 우리 시민단체는 농민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아 농진공·농조·농조연의 통합만이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 이같은 시민단체와 농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농정개혁차원의 3개 기관의 통합이 결정되어 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5백만 농민의 절절한 소망과 식량안보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조를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세력은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3개 기관 통합이라는 개혁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왔다.

농조와 농조연은 농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농림부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를 '하수인'이라고 매도하며 3개 기관 통합의 개혁작업을 저지시키려 하고 있다. 운영부실로 인해 연간 1,000억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봉급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조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요 일간지의 전면광고를 포함하여 통합반대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또한 농조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부 농조대의원을 이용, 일반 농민의 이름을 도용하여 허위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해당지역농민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더구나 9월 30일에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의 반대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3개 기관 통합을 반대하는 50만명 서명운동과 지역구 국회의원 압력행사를 계획하는 등 최근 농조의 반개혁활동은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농업을 걱정하는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농단협, 전농, 한농연 등 농민단체는 이런 반개혁적 농진공·농조·농조연 통합 반대운동이 자칫 정부의 농정개혁을 저지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안정적 식량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 또한 통합반대세력이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게재하고 있는 통합반대의견을 담은 신문광고를 접하고 '3개 기관'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농업계 내부의 밥그릇싸움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우려하여 시민단체와 농민단체가 힘을 모아 긴급히 기자회견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 한다.

'3개기관의 통합을 통한 수세 폐지 및 농업생산기반의 구축을 통한 식량자급 확보'는 5백만 농민의 지속적인 바램이었으며, 시민단체들과 농민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한 농조 등의 자체구조개혁안의 비현실성과 최근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통합반대 행동을 볼 때 3개기관의 통합은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3개 기관의 통합'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농정개혁과제임을 다시 한 번은 국민 앞에 천명하며, 농조와 농조연 등 기득권세력은 통합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과감하고 철저한 자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향후 통합반대세력의 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바램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농조와 농조연이 통합반대활동을 계

속한다면 우리농업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농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IMF로 위기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개혁 조치를 조속히 단행한다는 취지에서라도 농조를 비롯한 통합반대세력을 엄단하고 3개 기관의 통합을 조속한 시일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3개기관통합이라는 농정개혁과제가 무산될 경우 정부와 정치권의 국정개혁에 대한 불신은 물론, 영농의욕 상실과 생산기반 붕괴로 인해 조만간 닥쳐올 전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서 국가식량안보가 무너지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있음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농업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농진공, 농조, 농조연 등 3개 기관을 즉각 통합하고, 이를 위해 통합반대세력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1998년 9월 29일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농민단체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

농지개량조합의 반개혁적 집단행동을 규탄한다.

\*\*\*\*\*

태풍으로 비가 계속오고 벼가 쓰러지는데 벼베기에 대비한 물관리는 팽개쳐 놓은 채, 농조 직원들이 농민들까지 현혹하여 통합에 반대하는 집회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 사건 자체가 이미 농조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발호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농조가 이대로 갈 경우 퇴직금조차 줄 수 없는 상태의 대다수 농지개량조합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화되어 물관리 체계가 무너짐은 물론 대다수 직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되어 있다.

반면 3개기관이 통합되면 중복사업이 정비되고 시설설치와 유지관리가 일원화되어 농업 생산기반 정비에 도움이 됨은 물론 다수 직원의 고용도 안정되고 정부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수세를 없앨 수 있다.

2004년까지 1조원을 조성하여 정부지원도 안 받고 수세도 폐지하겠다는 농조 자체 개혁안은 이미 농림부 농진공·농조·농조연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전혀 실효성 없는 안으로서 자리와 기구를 지키겠다는 미봉책임이 판명이 났다.

농진공·농조·농조연 3개기관 통합과 수세폐지는 농민단체·시민단체는 물론 5백만 농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농정개혁과제로서 정부와 정치권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이를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농조는 즉각 반개혁적인 움직임을 중단하고 농민과 농업회생 차원에서 3개기관 통합과 수세폐지의 대의에 맞서지 말 것을 경고한다.

1998년 9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李水金)

서초구 양재동 332-1 경원빌딩 3층 전화)529-6347 전송)529-6348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농조해체·수세폐지!

농업기반사업의 국가부담은 오백만 농민의 오랜 숙원이요, 한결같은 요구이다.

농지개량조합(농조)은

이름 외면하고 호도하려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에 대한 참회와 더불어

농업희생·식량자급·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업대개혁의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

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은 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의 철회와 공개 사과를 통해  
노동조합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1. 농조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 1) 농조는 농민을 수탈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수리조합이 자신의 태생인 것에 대해 우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 2) 농조는 식량자급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온 국민이 쌀개방에 맞서 UR반대투쟁을 벌일 때에 농조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식량자급을 운운하는가? 김영삼 정권의 눈치만 보며 숨죽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농조가 아니었던가?

2. 농조가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다고?

수해나 냉해피해로 울상을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벼이삭에 한톨의 나락이라도 달려있으면(이삭을 향해 대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낱알 부딪치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수세는 반드시 내야 한다며 농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농조 아니었던가? 농조가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다면 자신들이 책임질 수도 없는 수세폐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재해지역의 수세탕감부터 약속해야 한다.

3.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통폐합을 통한 농업기반공사의 설립을 농림부장관과 일부학자, 농민단체가 농어촌진흥공사와 영합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니?

- 1) 자신들의 주장을 농민, 농민단체, 농림부 등 누구하나 손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막가파식으로 이 사람, 저 단체를 마구 매도해도 되는가?
- 2)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이 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내기 위해 UR반대투쟁으로 멀쳐일어났던 농민들과 함께 투쟁해오면서 농업·농민에 대한 애정을 가진 소신있고 양심적인 학자로 인정받아 왔으며 지금도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게다가 농림부 장관 인선이 당리당략에 흔들

리면서 반개혁적 인사가 농림부 장관에 내정되던 위기적 상황에서 농민단체들이 부정으로 세워  
낸 장관이기도 하다. 농업·농민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뉘히 알고 있는 사  
실을 자신들의 반개혁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도하러 들다니...

- 3) 군사정권의 폭압속에서도 이 나라의 농업을 지키고자 치열히 부정해왔던 500만 농민의 대표조직  
을 근거없이 매도한데 대하여 어제는 사과불 해놓고서 오늘은 또다시 일방적인 광고를 통해 이  
를 뉘풀이하는 자신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가?

#### 4. 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은 이름만 노동조합 아닌가?

- 1) 우리 농민들은 노동조합이란 자기 직장단위 노동자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사회적 정의를 세워나가는 노동자들의 조직체라고 믿고 있다. 반농민적인 정권과 불합  
리한 제도로부터 농민들이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 농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기는 커녕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정권의 집달리 노릇에 충실했던 자신들의 과거는 반성치 않으면서 어찌 감  
히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도용하여 개혁을 방해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하는가?

- 2) 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의 자금의 행동은 농지개량조합 노동자들의 권익과도 배치되고 있다. 우리  
는 농조가 과거에 어찌했던 농조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또한 IMF에  
따른 실업사태로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농가부채로 파산  
직전에 처한 우리 농민들이지만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따라서 농조의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고민을 함께  
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의 설립이후에도 물관리는 전문성을 갖춘 현재의 농조직원들  
이 담당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의 농조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입장을 벗어나 지역유지 행세하기에 바쁜 농조 조합장이나 상층 관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기에  
여념이 없다.

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은 더이상 전체 노동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노동조합이라는 이름  
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각이 혼란스러워질까 걱정이다.

#### 5. 농업생산기반과 관련하여 물관리는 핵심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또한 부분적인 사업일 뿐이며 농업생산기반을 조성·운영·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국가가 책임져 야 한다.

- 1) 농업생산기반사업에서 불관리 사업은 수도작 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한 물관리사업으  
로 확대되어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사업은 국가의 책임아래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되어야  
한다. 대형시설공사와 경지정리·물관리의 주체가 각각 나뉘어져 운영해오던 현재의 폐해는 국가  
의 책임을 모호하게 흐려놓으면서 고스란히 농민들의 부담으로 전가시켜 왔다.
- 2) 농업생산기반사업이 국가의 책임아래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담복농업교류나 통일 이  
후 최대의 과제'로 등장하게 될 한반도의 식량자급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황폐화된 북한  
의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통일된 농업생산체계를 갖추는 일은 민간단체나 부문별 사업의 짜  
집기 형태로는 가능하지 않다.

6. 김영삼 정권의 신농정을 등에 업고 정확한 타산없이 사업영역만 부풀려왔던 농어촌진흥공사의 철저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간척지 조성사업이나 대규모 경지정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나 서구형 유리온실사업 등은 당장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되어야 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농조의 횡포나 반개혁적인 행위때문에 농민들의 눈이 온통 농조에게 쏠리고 있는 틈을 타서 개혁을 늦추거나 건너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오히려 기대조각에 더 많은 비리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농민들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잊지 않고 있다.

7. 정부는 수세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비록 조보적인 논의물 위해 실무단위에서 작성한 법률안이라고 하더라도 수세(사용료)를 존치토록 한 내용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에 대한 해명과 수세폐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실무작업단의 문건이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수세와 관련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포기, 농민희생 정책으로 일관했던 과거정부의 농정으로 인해 끝없는 몰락과 고통속에 내몰렸지만 외연하게 이 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지켜왔으며 인간적인 대접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땀흘린 댓가를 옳게 받아본 적도 없지만 인간적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농사를 지어왔다. 앞친네 뒷친격으로 IMF 사태를 맞아 농자재값은 치솟는데 반해 농산물가격은 폭락하면서 농가부채로 파산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농정개혁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개혁을 거스르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만한 인내가 남아있지 않다. 농업희생·식량자급·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그 어떤 희생이라도 지를 각오가 되어 있다.

**1998년 8월 28일**  
**전국농민희생연맹 의 장 이수금(李水金)**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2-1 경원빌딩 3층 전화)02-529-6347, 전송)529-6348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정부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세 기관의 해체·통폐합 방침과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 발족 계획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의 세 기관을 해체한 후 통폐합하여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가 발족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발표와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

이는 그간 정부가 강조하고 발표하여 온 비 공기업부분에의 경쟁원리 도입과 획기적 경영효율성 위한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유사중복기능을 갖는 기관의 통폐합 추진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국가적으로는 공공사업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건설시장개방과 통일대비 생산기반조성 준비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국민에게는 합리적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예산의 절감과 이윤丰厚的 부담경감을 결과적으로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농민들에게는 생산기반 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서비스 증대와 함께 부실 미달기준 농지개량조합의 통폐합을 통한 조합비 경감을 가져올 것이다. 사실 모든 농민들에게는 조합비란 표현보다 수세란 표현이 일반화 되어있다. 많은 운영경비 절감과 생산기반정비 예산외 절감은 예상컨대 전체조합비를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므로 농민들에게는 수십여년간 원망과 한으로 쌓여온 수세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시한번 정부의 농진공, 농조연, 농조 세 기관의 해체·통폐합과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의 발족 계획을 적극 환영, 격려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은 자체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함께 부실조합 설립기준 미달 농지개량조합은 즉각 통폐합되어야 한다.
2. 한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지개량조합은 통폐합 반대 입장과 활동을 중단하고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입할 것을 권고한다.  
(조합원들이 농민이므로 일반 농민들이 조합의 통폐합에 반대할 것이라는 주장은 농조, 농조연만의 희망사항인 것을 누구보다도 농조, 농조연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평소 농조의 가까웠던 극히 일부의 농민들이나 힘없는 농조의 일선 직원들을 계속 통폐합 반대운동에 앞장서게 한다면 감당 못할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가 끊기고 수세거부가 전국적으로 발생되어 부실 퇴출된다면 일선 직원들의 고용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게 되며 그동안 농조가 시설관리에 기여한 몫마저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극적 통폐합은 많은 일선 직원들의 고용효과를 유지시킬 것이며 전농은 해체·통합시 발생하는 일선 직원들의 고용효과를 가능한 보장하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해체·통폐합 후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의 발족까지 힘있게 추진하여 생산기반의 강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의 농진공, 농조연, 농조 3개 기관 해체 통폐합 이후의 발전적 기관으로의 발족을 전농은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다.
4. 88년산 수세(소위 조합비)와 함께 향후 수세를 폐지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발전에 농민들이 참여케 하여야 한다. 치수사업은 국가 사업이며 수리시설은 사회간접자본임을 전농은 누누히 주장해 왔다. 전농은 향후 수세인하, 수세폐지가 될 것을 진정으로 기대한다.

1998년 7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李水金)

□ 한농연 발표 성명서 □(9월 21일)

## 농조연, 농조의 반개혁적인 통합반대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 농조와 농조연은 통합반대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한농연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농진공과 농조, 농조연 3개기관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그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증가를 철폐하기 위해 3개기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런 5백만 농업인의 주장이 정책에 반영되어 3개기관의 통합이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최근 농진공-농조-농조연 3개 기관 통합일정이 법안상정계획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통합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1일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농조와 농조연은 통합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자체 개혁안에 따른 개혁추진방향을 강변하고 나왔다.

이같은 농조연과 농조의 통합반대 활동은 어떤 미사여구로 장식하더라도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500만 농업인의 요구사항인 '농진공-농조-농조연 통합'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농조와 농조연은 자신들의 반농민성을 숨기기 위해 UR반대투쟁을 정점으로 하는 각종 농업인권의보호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인단체들의 농민대표성에 시비를 걸 뿐만 아니라 '농진공의 하수인'이라는 당발까지도 합부로 일삼고 있다.

더구나 얼마전에는 불법적인 허위 통합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현장의 농업인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온갖 궤변으로 숨기려는 처사를 계속하고 있다.

5백만 농업인의 자조조직이라 운운하며 농조직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개혁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농조와 농조연에 대해 한농연은 5백만 농업인을 대표하여 엄중하게 규탄하며 강력하게 경고한다.

반개혁적인 3개 기관 통합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자체개혁안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공염불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통합이후에 농업인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

만약 이 두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전히 기득권 수호차원의 반개혁적 통합반대운동을 계속할 경우, 5백만 농업인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농연은 이런 현장의 농업인을 대표하여 강력한 움직임을 가할 것임을 천명한다.

농림부도 이런 농조와 농조연의 통합반대활동에 대해 관련당국으로서의 책임성을 통감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농정개혁이 기득권의 이기주의에 의해 훼손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농림부도 5백만 농업인의 외면을 당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 조직 통폐합 추진에 따른 우 리 의 입 장

“농업관련 3개기관 통폐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농업지원조직인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는 반드시 통폐합되어야 하고,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효율성 향상과 경제난 극복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간접자본인 농업기반시설은 국가의 책임으로 관리되어야만 한다.

이를 역행하는 행위는 반농민적 처사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본분을 망각하고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IMF 관리체계의 국란 극복과 21세기를 대비한 식량안보 수행을 위해서는, 또한 농업과 농어촌개발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관련 3개기관을 통폐합하여 농정수행을 위한 새로운 통합 공기업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다.

이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농업관련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에서 수세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인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3개기관 통폐합은 11만 전업농의 일치된 요구다.

3개기관의 통폐합은 5백만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강력한 요구이며, 특히 21세기 우리 농업의 간성으로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11만여 전업농(쌀 전업농 63,373명)들은 이를 적극 찬동한다.

□ 통폐합을 저해하는 일부 농조, 농조연 간부 및 노동조합의 반농민적 처사는 단호하게 저지되어야 한다.

물론 개혁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과 자기희생이 따르지만 3개기관 통폐합이 대의를 위한 현실적, 필연적 상황임은 물론, 직접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이 찬성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개인·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국가적 명제인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때, 자신만의 기득권 보장과 권익보호만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간에 분란을 조장하고 반목을 유도하는 처사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농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왔던 농업관련기관은 시대적 명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하고 추진하는 정부시책에 대해, 그야말로 자기 생존권적 이기주의나 부정적이고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애국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리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농민적 처사에 찬동하거나 방조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의 저지를 위해 11만 전업농은 어떠한 실행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 「농지개량조합원회」는 대규모집회를 즉각 중단하라.

9월 30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원회」는 집회를 즉각 중단하고 3개기관 통폐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998년 9월 28일

전업농중앙연합회  
회 장 한 수 응



## 기자 회견문

IMF 시대를 맞아 농업인들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농가 부채가 누증되고 농축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생산비는 대폭 인상되는 지경이다.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지자체, 농업관련단체, 농민이 모두 힘을 합쳐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당국의 과감한 농업지원책이 아쉽고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농 관련 기관이 있어 농업희생을 위한 제도정비 작업을 늦추고 있다. 농업 관계기관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진해 농민에게 무한봉사를 함으로써 농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의 세기관은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통폐합하여 농민을 위한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농조와 농조 연합회의 통합 반대 활동은 농민을 우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가 하면 농민단체의 활동을 반 이성적으로 규정하는등 도저히 납득 할수 없는 것으로 대다수 농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통합반대 서명시 무더기 인장도용, 농민의 동의가 없는 유명 단체 결성, 3개 기관 통폐합에 대한 왜곡된 논리 주장, 허위 광고등 농조와 농조 연합회의 활동은 상식적으로 용납 할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 우리 전북지역 농민단체들은 농업희생과 성공적인 농업 개혁을 위해 3개 기관의 통합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이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하나: 농진공, 농조, 농조연은 자체구조 조정을 강도 높게 먼저 실시하고 3개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폐합 해야 한다.

하나: 농조와 농조연은 통폐합 반대 입장과 활동을 중단하고 통폐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농조와 농조 연합회는 9월30일로 예정된 서울 집회를 즉각 철회하고 3개 기관 통폐합에 동참하라.

하나: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3개 기관 통폐합 후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의 발족까지 힘있게 추진하여 생산 기반의 강화를 이끌

어 내야 한다. 정부의 농진공, 농조연, 농조 3개 기관 해체 통폐합 이후의 발전적 기관으로의 발족을 전북 지역 농민단체는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다.

하나: 98년산 수세(소위 조합비와)와 함께 향후 수세를 폐지 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발전에 농민들이 참여케 하여야 한다. 치수 사업은 국가 사업이며 수리 시설은 사회 간접 자본임을 전북 지역 농민단체는 누누히 주장하여 왔다. 우리 농민 단체는 향후 수세 폐지가 될 것을 진정으로 기대 한다.

하나: 김영삼 정권의 신농정을 등에 업고 정확한 타산없이 사업영역만 부풀려 왔던 농어촌 진흥공사의 철저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하나: 농업 생산 기반과 관련하여 물관리는 핵심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또한 부분적인 사업이므로 농업생산 기반을 조정, 운영,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하나: 농지 개량조합 노동조합의 작금의 행동은 농지개량조합 노동자들의 권익과도 배치되고 있다. 우리는 농조가 과거에 어찌 했던 농조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농조의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고민을 함께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농업 기반 공사의 설립이 후에도 물관리는 전문성을 갖춘 현재의 농조 직원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 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지개량 노동 조합은 더 이상 전체 노동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개혁에 적극 동참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우리 전북지역 농민 단체들은 위와 같은 요구가 조속히 시행될 것을 촉구하며 바람직한 3개 기관 통폐합이 이뤄 지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힌다.

1998년 9월 28일

전북 지역 농관련 단체 일동

# 홍 · 민 · 통

## 홍시단 민족통일운동본부(홍민통)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고 문 : 강우일, 강원용, 김재중, 박형규, 서영훈, 송월주, 안병욱, 조정근, 최근덕  
공 동 대 표 : 김중운, 김학준, 이운구, 이호철, 장충식, 홍일식, 김종립(상임)  
지역대표위원 : 고장권, 김세열, 노성만, 박찬석, 백낙환, 이증훈, 조장환, 하서현, 한기영

- 수 신 : 농림부 농촌개발국 이상영 과장(02-504-9402, 02-507-3964(F))
- 발 신 : 단국대 농대 학장 張原碩 (농업경제학)
- 제 목 : 「농업관련기관, 통폐합 해야」원고 발송의 건
- 원고분량 : 원고지 10매 분량 (내용의 가감은 편집자 임의로 하셔도 됨)

### 농업관련기관, 통폐합 해야!

단국대 교수 張原碩 (농업경제학)

역대 정권이 출현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온 과제 중의 하나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새정부에 들어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3개 기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과 함께 전문화시키면, 대략 계산해보아도 약 20%~30%의 인건비와 운영비 감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약분만 해도 약 677억원 내지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및 기술력을 집중하면 시설물 관리의 효율이 높아지고, 농업용수 관리의 체계화와 수질개선효과가 있으며, 규모화사업도 현재처럼 농진공 군지부 식원이 하는 것보다 농조식원이 담당하면 현장사정에 밝아 효율적이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든 마을단위로 있는 흥농계를 활성화시켜 말단수로 자주관리를 강화하면 농촌마을에 활력이 생기고, 수로감시원으로 활동할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농업인이 보람과 긍지를 더욱 갖게 된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과 농업·농촌·농업인의 입장에서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는 통폐합이 역대 정권에서 왜 말잔치로만 끝났는가. 그것은 원론과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각론과 실행단계에서는 대부분 집단이 기주의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 그동안 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일부 부도덕한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서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부에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개혁부터 먼저하고, 매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러나 추진은 과감해야한다.

새정부 출범후 100일 동안의 평가를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지부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농정분야만 보아도, 개혁은 대통령과 장관을 비롯한 몇사람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공직자와 농업관련 기관들의 임직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앞서 말한 3개 기관만 해도 그렇다. 도대체 개혁의 결과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농업생산기반정비 기능을 3개 기관이 나누어 수행, 비효율성을 여전히 노정하고 있다. 기술용역업무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농조연, 농진공에 업무를 배분 시행하고 있고, 생산기반정비 사업과 수리시설 유지관리업무는 농조와 농진공이 분담하고 있다.

지방단위엔 유사한 기관도 너무 많다. 농민 9명이 농관련종사자 1명을 먹여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실제로도 단위에는 농진공 지사(9)와 농조연 지회(8), 시·군 단위에는 농진공 군지부(83)와 농조(105)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최근의 IMF 사태를 계기로 농업관련 기관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리관리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수질관리체계의 개선도 요원하다. 수리시설 설치사업은 농진공, 유지관리는 농조가 분담함으로써, 시공자와 관리자간 이원화로 분쟁발생 소지가 있고, 동일수계내의 인근 농조간에 분쟁 가능성까지 상존한다. 그동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발에만 치중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종합적인 수질관리개선노력은 미흡한 편이다.

농지개량조합의 운영부실 문제도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조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다수 조합이 파산 등 경영위기에 처해있다. 조합비 보전차원의 국고보조는 매년 1,000억원 수준이나 실제 조합운영 경비에 미달하여 농조운영이 부실화되고 있다. 전국 105개 농조중 자립농조는 10개에 불과하며, 95개 농조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경비 부족으로 예산편성조차 어려운 조합이 20개(19%),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조차 줄 수 없는 조합이 31개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소규모 조합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고, 획기적 운영개선 추진에 근본적 한계를 보인다. '97년 6월까지 자율적인 통폐합 시한을 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조간 통폐합 실적은 1개소에 불과하다.

요약컨대, 농조의 운영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여타기관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 이후 3기관이 통합되어 각자의 기능이 중복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1998. 7. 16.

## 통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약칭 통일통)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고 문 이은용 (서울대 명예교수)

위 원 장 김동희 (농수산물유통연구소 이사장)

부위원장 서기원 (순천향대 경상대 학장)

간 사 장원석 (단국대 농과대학장)(0417·550·3600)

연구위원 손용석 (고려대 자연자원대 교수) 외 83인 올림

여 백

## 4. 주요 신문사설 · 칼럼

여 백

# □ 동아일보 사설 ('98. 9. 14, 5면)

## 농정조직개편 후퇴없어야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개혁작업이 해당기관의 반발로 원칙이 흔들리거나 후퇴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다. 공공부문이야말로 사회전반의 개혁요구를 앞장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 금융개혁 등 민간부문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 요구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일부 공공기관은 경영진과 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정부의 개혁작업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지극히 유감스런 일이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최근 18개 정부부처 산하 출연 위탁기관 1백33개소에 대해 경영혁신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나 한국마사회 등 8개기관이 인력감축 사업구조개편 경비절감 등 정부 개혁지침을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관들도 인력감축 등의 개혁노력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등의 통폐합을 통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작업과 농협 축협 임협 등 농업인 자조조직의 통합을 둘러싼 집단반발이다. 조직의 합리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당연히 합쳐져야 할 기관들인데도 조직이기주의에 편승해 조직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 겉으로는 자체구조개혁안을 내놓을 테니 정부가 이를 수용하라는 것이나 실제로는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정부의 통합

방안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농진공 농조연 농조 등의 통합 당위성은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농정지원 기관 중에서도 기능중복과 조직비대화가 가장 두드러진 부문이 농업생산기반 조직이다. 이들 기관은 비슷한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낭비와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되어 왔다. 그동안 농업부문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농촌과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못한 것은 농업지원조직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조직인력구조에도 원인이 있었다.

농업 관련 협동조합의 통합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농민들의 자조조직이면서도 협동조합 본래 목적인 경제 지도 사업은 뒷전인 채 신용사업에만 열중해 왔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한정된 지역, 한정된 농업인을 상대로 불필요한 경쟁을 하면서 방만한 조직운용과 예산 낭비로 농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마침내 농민단체들이 이들 조직의 통폐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단체들은 15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농정조직과 협동조합의 통폐합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개혁의지다. 농정지원조직을 단일조직으로 정비해 농업부문 투자의 효율화를 꾀하고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개혁노력이 또다시 주춤거리는 안된다.



## 농업 지원조직 재정비할때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농업과 농어촌문제를 효율성이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을 금기시해왔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온정주의적' 재정지원이 확대되면서 농업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지출과 농업 지원기관 근무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농가 16가구당 1명꼴에 해당하는 8만8천명이 농업지원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들 조직의 구조조정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42조원, 농특세사업에 15조원 등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졌으나 그 혜택이 농촌현장과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못한 배경에는 방만한 예산 운용과 경직된 인력구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농정 지원기관 중에서도 기능 중복과 조직 비대화가 두드러진 부문이 바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및 그 연합회다. 이들 기관은 7천명이 넘는 인력이 비슷한 업무를 2중 3중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농지개발조합의 경우 파산가능

성이 높은 조합이 50%를 넘을 정도로 부실 정도가 심하다.

따라서 농지개발조합과 그 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기관을 단일 조직으로 정비해 농업부문 투자의 효율화를 기

하는 것이 농업 발전과 농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승적 방안이다. UR협상이후 자생력을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IMF 위기까지 맞은 농업과 농어촌지역이 정부의 재정지원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조직의 쇄신과 지원부문의 거품제거가 우선돼야 한다.



곽 채 기  
(전남대학교수·행정학)

기고

金正夫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기반공사' 기능 효율화 절실

국민의 정부는 농업부문 국정 개혁과제의 하나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농지개량조합(농조),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등 3개 기관을 농업기반공사(가칭)로 통합해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개 기관의 통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팽팽해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 기관의 통합 그 자체는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이들 기관의 통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소모적 찬반논쟁에서 탈피하기 위해 몇가지 측면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조직의 지속적 존립 가능

첫째, 대(對) 농민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농조, 농조연, 농진공의 운영은 통합돼야 효율화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농조와 농진공의 경영은 자체 수입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로 운영돼 왔으나 그나마 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

농조는 지난 88년부터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물관리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농진공 역시 주요 기능과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요 업무영역인 간척사업 등은 축소가 불가피하고 농산물 지하저장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등은 더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처럼 자립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여건하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지속적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관련조직의 통합이 선택되었다.

## 열악한 경영상태 개선

둘째, 3개 기관 통합은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된 농정개혁 정책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 수립과정에서 결점없는 완벽한 정책은 없으며 정책결정은 결정권자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중복기능 해소, 대 농민 서비스 개선 등 경영혁신이 절실히므로 3개 기관을 현행 체제로 각기 존속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3개 기관 통합 결정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뤄진 정책결정권자의 고뇌에 찬 선택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 농업·농민서비스질 향상

셋째, 3개 기관의 통합은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확충, 농지규모 확대,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기구를 효율화하는 것이 지 이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특히 주곡 자급 차원에서 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3개 기관이 통합되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서비스는 더 향상될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3개 기관 통합을 농정개혁 과제로 선택한 것은 이들 기관의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 통합에 대한 국력 소모적인 찬반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농조, 농조연, 농진공 3개 기관은 농업과 농민을 위한 조직이지, 기관의 조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이들 3개 기관의 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농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어기심을 버리고 서로 협력해야 할 때다.

## 농정조직 통폐합 가시화 농진공 주체돼야 효과적



**朴正根**

〈전북대 교수·농업경제학〉

부실은행이 퇴출되고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이제 농정조직의 구조조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농업부문 유사기관의 통폐합문제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

농정조직의 개편문제는 왜, 무엇을 위해, 누가 주체가 돼서 이기관들을 통폐합해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밝혀야 비로소 농정 구조조정의 방향이 분명해진다.

먼저 세기관의 통폐합 논의가 단순히 기능의 중복성에서 오는 예산낭비, 조직의 비효율성 또는 농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업관련 지원증사자수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농업은 자원위주에서 기술위주로 전환돼 농업생산이 농촌 노동력과 농지 등 투입물보다 생산력 증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 등 농업관련 지원부문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농정조직 개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논리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기술개발은 반드시 제도변화를 가져온다. 그 사회가 새로운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제도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때 경제적 자원낭비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게 된다. 농민측면에서도 농지가 어느 구역에 포함돼 있느냐에 따라 수리비 부담에 차별이 나타나는 모순도 발생했다. 또 수리시설 관리와 경지정리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수요에는 계절적 진폭이 크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행정기관 간의 기능중복 및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큰 것이 사실이다.

농지개발조합은 과거와 달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과 함께 그 기능에 공익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에 대한 물수요 패턴도 다양하게 변화해 농업외 용수의 수요도 급증한다.

농업이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됨에 따라 물관리도 지역에 따른 체계화보다 수계나 물의 사용효율에 따라 체계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물관리도 계측장치, 원격조작, 자동제어, 수질오염 방지 등의 관리시설과 전산처리에 의한 농어촌시스템의 자동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농업과 농어촌개발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제도변화의 당위성은 농어촌진흥공사로의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이를 수용해 사회적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은 농진공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 ■ 논 단

임재환

충남대 교수 농업경제학



정부 산하조직 개편과정에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농정개혁과 농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농진공 등 정부투자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화와 경영 합리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농진공과 농조-농조련 통합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에 따라 토지개량조합연합회를 농진공과 농조-농조련 이원화 체제로 한 이후 끊임없이 재통합론이

농진공은 인원을 19% 감축하고 조직을 축소개편하며, 기본조사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유사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기능을 가진 농조-농조련도 농진공 수준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선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기능 및 조직을 통폐합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애초의 개혁방향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농진공과 농조-농조련 통합은 제도·기술·관리행정·재정 측면은

## 농정조직 통폐합해야

거론돼왔다. 그 당위성은 두 기관이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공사감독·토양조사 및 자질시험 등의 기능에서 기술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고, 정부의 재정투융자 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두 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 농림부 농지국으로 같다는 점에 있다. 역대정권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여러 이유로 지금까지 존치시켜왔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난국은 국가기관과 기업들이 비효율성·비합리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해온 데서 비롯됐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정부는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재정투융자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수많은 산하기관을 기능별로 통폐합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그런데 농림부가 최근 펴낸 '농정추진평가와 과제'를 살펴보면

물론, 농지관리의 효율성 면에서도 마땅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70년대 이전의 토지개량조합연합회 시절과 같이 농진공 안에 조합유지관리처를, 지사에 조합유지관리부를 두고, 군지부에는 유지관리과를 설치하여 농지를 관리한다면 비용절감은 물론 합리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또 시장개방 체제에 맞는 농지이용 증진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농조는 조합장을 민선으로 뽑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정부가 대고 농업기반 조성 사업비도 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는 현실 아래서는 조합장 직선이 별 의미가 없다. 농진공과 농조-농조련 통합 문제가 몇몇 고위층의 자리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장 희소한 자원인 농지의 개발보전, 농촌 및 농업 발전, 농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본다.

여 백

## 5. 잘못된 광고내용 해명자료

여 백

**농조·농조연 광고(8월 27일자)에 대한  
해명 자료**

지난 8월 27일 농조·농조연 명의로 일간지  
신문광고에 게재된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 관련 내용이 기획예산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달라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해명자료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팀 행정3팀**



□ 농조·농조연 게재 광고 내용 (동아일보, 8월 27일자 광고)

기획예산위원회는 2차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계획은 공기업인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의 경영혁신방안으로 농업인의 자조·자치조직인 『농지개량조합(농조)』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은 해체 통합하여 가칭 『농업기반공사』로 변형시키겠다는 것이고, 현재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기본방침과 달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막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관련내용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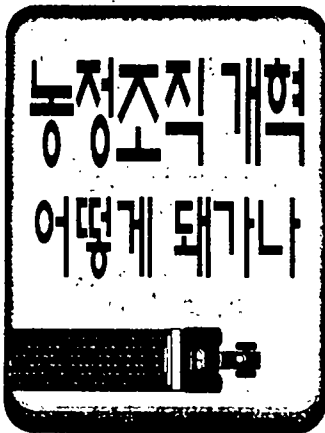
□ 사실 확인

-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98. 8. 4일 확정)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의 통합 (2000년)에 대비하여 구조조정 추진
-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방안('98. 8. 17일 확정)
  - 농진공, 농조, 농조연 등 3개기관 통합 추진

▶ 농진공·농조·농조연의 통합은 이미 발표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과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위원회의 일장은 농림부와 동일하며 정부의 기본방침과는 달리 농림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에 어긋나 밝혀드립니다.

6.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관련  
일반기사모음

여 백



**실태와 문제점**

농지개량조합은 1906년 수리조합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성된, 92년의 역사를 지닌 농정조직이다. 그만큼 우리 농정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

현재는 전국 105개 조합, 93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지시설 재해복구 등이 농조의 주된 역할이다.

농정조직 통합을 둘러싸고 정부와 관련조직간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농정조직의 해묵은 병폐를 청산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작업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 정부는 농촌의 물 관리를 맡고 있는 농지개량조합(농조)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등 3대 조직을 2000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나, 농조 측은 이를 개악(改惡)이라며 반대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농정조직의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개혁방안과 반대논리를 살펴본다.

역원으로 삭감됐다. 농조연은 농조가 위탁한 사업을 추진해 자체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이다. 672명의 임직원에 본회와 8개 지회로 구성돼 있다.

◇농조의 운영부실=운영비를 국고에서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조합이 경영부실로 파산 위기에 놓였다. 전국 105개 '농조 가운데

있다.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나 대의원 매수 등 혐의로 사법처리된 예가 수십건에 이르는 지적이다.

95~96년 농조가 발주한 공사 263건(총예산 7,009억원) 가운데 65.4%가 제한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평균 낙찰률도 94%로 농진공의 89%보다 높아 많은 예산이

## 105곳중 95개 국고보조로 연명 조합장·공사비리등 잇단 잡음 '거대 비만조직' 대수술 시급

농조가 관할하는 농지면적은 54만7,000ha로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절반을 차지한다. 임직원 4,024명, 대의원 6,5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농조는 시설관리를 위해 조합원, 즉 농민들로부터 이른바 수세(水稅)를 받는다. 87년까지는 10a당 벼 26kg어치의 조합비를 받았다. 이후 국고보조금 지급과 조합별 자율화 조치에 따라, 지금은 10a당 평균 6,300원이다.

국고보조금은 95년 1,020억원, 96년 1,065억원, 97년 1,119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다 올해엔 917

95개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충당금이 1억원 미만의 조합이 79개나 된다.

농조는 조합비 인하쪽에 비해 정부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리시설 현대화로 유지관리비가 줄어든데다 농조의 자체 경비절감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농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적다는 판단이다.

◇조합장 선거부정과 발주공사 비리=88년부터 조합장을 대의원들이 뽑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의원 매수 등 부정선거 시비가 계속되고

남비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유기기관의 기능중복=농조와 농조연, 농진공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돼 있는 상황이다. 농업생산기반의 기본조사나 설계 감리 등의 업무는 농조연과 농진공이 맡고 있다. 또 그 시행이나 유지관리 업무는 사업규모에 따라 농조와 농진공이 분담하고 있다.

특히 수리관리체계가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수계에서 인근 조합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도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 정부의 청사진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 2000년 1월에 농업기반공사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농정조직 개혁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개 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신설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 각 기관이 대등한 조건으로 해체, 통합토록 할 방침이다.

농업기반공사의 조직은 본부 밑에 9개 도 사무소, 80여개의 지역 사무소로 구성할 방침이다. 지역 사무소 수는 수계관리와 지역적 여건, 현행 농조구역을 감안해 잠정 결정됐다. 지역사무소장은 지역특성과 물관리의 전문성을 감안, 과반수를 현행 농조 인력 중에서 계약직 등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통합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

# 3곳 통합 2000년 농업기반공사 출범

### 구조혁신 통해 年 600억~1,000억 예산 절감

부는 통합전에 3개 기관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99년 말까지 농진공은 400명을 감원, 2,078명으로 줄이고 농조는 4,024명에서 692명을, 농조연은 672명에서 112명을 각각 감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배수개선,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농업용수의 종합적 관리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촌지역종합개발 ▲해외농업 개발 및 통일대비 농업생산기반 정비기술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수세를 전면 폐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농업용수 공급비용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농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지역사무소에 지역별 농업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단국대 張原碩 교수는 "이같은 농정 개혁으로 600억~1,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줄고 사업추진 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통합 논의 일지

▲88년=평민당, 농조의 시·군 이관 주장. 조합비 인하, 장기채 국고지원, 조합장 직선제 도입.

▲93년='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3개 기관 통합 추진. 현행 체제 유지하되 소규모 농조 합병 결정.

▲94년='농어촌발전위원회', 기술 용역사업 통합 등 거론. 민자당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소위', 농조의 지방공기업화 검토.

▲95년=농림부,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 추진. 농조의 도단위 대규모 조합화, 3개 기관 통합후 국영기업화 등.

▲98년 7월3일=기획예산위, 3개 기관 통합 방침 확정.

▲7월20일=농림부,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8월19일=3개 기관 통합을 위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마련.

# 부실 운영·기능 중복...

## 農組 파산위기

### 농민들 시각

“배수시설이 엉망이라 물 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저 예산타령뿐입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농민 全澤均씨. 태풍 애니의 강습으로 다 익은 벼가 물에 잠긴 채 새싹 틔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쏟아냈다. “농촌이 이 지경인데 농조 직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통합반대 집회이나 참석하고...”.

대의원 몇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농조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부실한 물 관리와 독선적이고 불투명한 운영방식, 수세 징수 등에 모아진다. 특히 지난 1일 태풍 애니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 농조측은 전국의 임직원들과 농민조합원 등을 이끌고 상경,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임으로써 태풍피해 예방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원성이 높다.

농조와 농조연, 농진공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데 대해서는 전

### “조합운영 대의원 몇사람이 좌우” 불만

### 全農등도 “즉각 통합해야” 목소리 높아

하늘에 대한 쏠씨의 원망은 금세 농지개량조합(농조)으로 향했다. 농조 직원들이 농정조직 통합반대 집회에 참석하느라 태풍 애니의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얘기가.

전북 익산시 함라면 다망리의 崔춘봉씨. “농수로 정비작업은 농한기에 해야 하는데 영농기에 해 농작물과 영농에 지장을 준다”며 농조를 비난했다. “물관리 인력은 많지만 대부분 일용직들이라 책임감이 없다”는 원망도 곁들였다.

옆 마을인 황등면 신기리의 韓현묵씨의 비난은 보다 신랄했다. “수세(水稅)를 걷을 때 말고는 불필요한 인력들이 많고, 조합을 운영할 때도 조합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장 李水金)을 비롯해 농민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전농은 지난달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농민·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3개 기관의 즉각적인 통합을 촉구했다.

전농은 잇따른 성명을 통해 “농조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과도한 수세 징수는 수십년간 농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돼 왔다”면서 “조합장 선거와 사업 수주를 둘러싼 각종 비리 등 해묵은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개 기관을 즉각 통합하는 농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예산위-예산청 통합 당·정 논란 관광산업 투자 稅혜택

## 농진공+농조+농조연 통합법은 회기내 처리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달 초부터 정부 각 부처와 잇따라 당정 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등의 38개 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 발의 법안 일부는 그러나 당정간 견해차로 내용이 수정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정간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을 간추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건설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당측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현재 전국의 16개 공항은 공항관리공단이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인천 국제공항만 별도 법인이

관리하게 될 경우 공항간 연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되면 다른 공항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당측은 기획예산위원회와의 당정협의에서 "정부출연 연구소에 대해 자체감사와 감독기관의 감사 이외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도록 하고 있어 중복감사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농업기반공사법=농림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당측은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당은 원칙적으로는 찬

성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고용문제에서 가급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안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해 높은 상태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재정경제부와 당측이 개정안 내용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당측은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지만 재경부가 세수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외자유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만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정간 마찰이 일고 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아직 정부측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획예산위원회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는 안된다"며 "인사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수문관리탓 침수 농조 첫 보상

진주 진산농조 “직원 집회 관리부실” 인정

속보=경남 진주의 진산농지개량조합이 지난번 태풍 ‘애니’ 상륙 때 수문관리 잘못으로 농민들이 입은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해 <한겨레> 10월8일치 25면) 일부 보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정은 농지개량조합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이와 비슷한 형태의 피해보상 시비가 전국에서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진산농지개량조합(조합장 우종표)은 12일 “당시 농조 통·폐합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직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워 배수장 관리가 부실해 집에 따라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어 “피해 농민들과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주시 집현면 수곡면 등 10여곳에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침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지난달 30일 농개조가 배수지 수문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남강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수확기의 벼는 물론, 수박과 고추 우엉 마 등이 침수되는 등 모두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진산조합이 별도의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보상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우 조합장은 “농민과 피해액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기로 했다”며 “책임부분에 대한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아 합의에 이르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들은 만족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김현태 기자





지난달 30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농지 개량조합 노조와 농조1백만농민조합원회의 농업 생산기반 관련 3개 기관 통폐합 반대 집회의 여파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과 충남 일부지역 농민들이 농조직원들의 물관리업무 태만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태풍 예년의 복상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농조가 물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농림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공범아닌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농조의 책임논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다. 첫째, 물관리의 중요성이다. 농사는 물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벼농사는 더욱 그렇다. 최근 빈발한 기상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궁극적으로 물 때문이다. 앞으로 기상이변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물관리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태풍 「예니」와 농정조직 개혁

시점에 농조가 통폐합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직원뿐만 아니라 일선 수리관리인, 기술자들이 모두 상경함으로써 수문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주장이다.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야 알 수 있겠지만 농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번 태풍피해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을 지켜야 할 농조직원들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은 비난의 여지를 제공했음을 인정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3개 기관 통폐합방침에 대해 농조측은 농진공은 공기업이고, 농조는 농민의 자조조직이란 점을 들고 있다. 그만큼 농조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농민들을 위해 일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물관리 업무만큼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로의 통폐합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무리한 집회무산 노력과 과민반응이 이같은 화를 불렀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집회참석자를 처벌하고 해당농조를 사정하겠다는 업포에 개별적 처벌을 피하려는 농조직원들이 조합별로 전직원이 참석했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 「실사 전직원을 사정하고 처벌하겠느냐」는 묘한 심리가 작용해 조합을 소개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농림부가 농조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것도 넌센스다.



안 병 만  
〈농업부장〉

둘째는 농업관련 기관의 무한 책임성이다. 비록 전체 농조는 아니고 일부 지역 농조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물관리업무 소홀을 둘러싼 책임논쟁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써 농민으로부터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농업관련 기관의 책임성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알 수 있다. 농업관련 기관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포함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셋째, 그러므로 농업생산기반 관련 3개 기관의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물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농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며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개 기관 통합조직의 형태가 공사 또는 조합이어야 하는가 보다는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농민에게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조직으로의 탈바꿈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번 태풍피해가 더 컸던 것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농조는 물론 농림부도 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주장을 한 걸음씩 양보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정조직의 개혁방향은 농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농편의를 향상시키는 대원칙에 충실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연합통신 ('98. 10. 12)

### 농지개량조합, 태풍 침수피해 보상키로

(진주=연합) 池性熨기자 = 경남 진주의 진산농지개량조합이 지난번 태풍 '애니' 내습 당시 농민들이 입은 농경지 침수피해 책임이 조합측의 관리부실에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상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진산농지개량조합(조합장禹宗표)은 12일 '애니' 내습때 진주시 집현면과 대곡면 지역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침수된 것은 당시 농조 통폐합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직원이 상경,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 농민들은 대곡면 한실마을의 경우 저수지 수문관리인이 서울집회에 참석해 수문을 닫지 않는 바람에 남강물이 역류, 수박과 고추, 우엉, 마 등이 침수되는 등 3개 지역에서 모두 7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진산조합이 한푼의 보상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보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또 이번 결정은 전국 농지개량조합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앞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면 농조의 책임여부에 따라 보상문제가 재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산농조 관계자는 "조합 이사회에서 보상결정을 내렸지만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남도나 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끝)

**특기투고**

IMF경제한파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여름에는 집중폭우가 쏟아져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김대중대통령께서 정부구조조정 100대 개혁 실천과제를 천명했다.

김대통령께서 발표한 개혁의 지내용에서 농지개량조합과 농조연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유사기관을 통합한다는 내용이였다.

농민들은 그동안 다윈해 돼 있던 농업구조조정이 단일화된다는 기대감으로 김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는 생명산업이다.

우리가 먹는 주식, 농산물은 반드시 우리의 땅에서 생산된 곡식으로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흡수통합이 아니고 모든 기관이 외국농산물과의 가격과 품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 시위를 벌이는 처사는 농민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시위를 주관하는 기관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기관으로 존재해왔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

**농민을 기민하는 집단 이기주의**

그발표가 있던날 피천 종합청사에 물러가 시위를 벌였다.

일년 내내 피땀흘려 지은 농사가 폭우로 태풍에 휩쓸려 농작물이 논바닥에서 썩어가고 있는 마당에 꼭 오늘 시위집회를 가져야만 하는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시위단들은 관판버스까지 동원, 농민들을 선동하는 등 집단 이기주의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

정말 이행사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라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조금이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난극복을 위해 함께 걱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농지개량조합은 왜 이렇게까지 농민을 선동해 집단 시위를 벌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농업은 그누가 뭐래해도 귀중한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

않는가.

힘없는 농민을 선동하거나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농민을 기민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전업농연합회는 이기회를 빌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개기관의 통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래야만 우리도 당장의 불편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세계 농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잘살 수 있는 복지농촌을 실현, 후손에게 복된 농촌을 물려주는 부끄럽지 않는 조심으로 남지 않겠는가.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기관 통합이 기관의 이기주의를 떠나 국난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명분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농민들의 힘을 한데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박희규 <전업농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 광주타임스

제 129 호 (종합일간지) 전화안내 (062) 670-1004 1998년 10월 10일 토요일 (음력 8월 20일 庚寅)

## 기자수첩

조철상 기자

"해도해도 너무어요 농민들  
이야 빗줄에 죽어 버리고 천이  
넘어 1년 농사들 망치든 말든  
모르잖 하더니 이제야 왜 그랬  
는지 알 것소 농조 등폐함 반  
대 데모하러 관광버스까지 빈  
려 서울 가버렸다 안허요."

농민 김모씨(52·영광군 군  
남면)는 이번 태풍이 들어 처음  
수해를 당했을 때 친재지인이  
라며 산 탄중이라도 더 건지기

러 가  
버려  
어떻게  
빛을  
감아야  
한지  
모르겠  
다 떠

애들 책과 노트를 햇볕에 말리  
면서 막막한 심정을 어디에 하  
소연하느냐고 묻고 있다.



### 수문방치로 늘어난 수해 피해

위해 뛰어다녔다.  
그러나 남창천 수문이 연리  
지 않아 20ha의 논과 집이 물에  
잠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농  
조가 말로는 농민과 함께 살아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할 이익을 챙기는 행동을 서슴  
지 않는다면서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다.

또 상인 큰모씨(52)는 추석장  
사건 하려고 돈을 빌려 구입했  
농은 구멍가게 문닫을 다 떠내

영광농조는 수문을 연지 않  
아 생긴 피해를 어떻게 해결하  
는지 두고볼 일이다.

조환장이 죄아와 미안하다는  
만만해서는 안된다. 시대가 탄  
라지면 공무원들 비롯해 모든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  
다.

어려운 때일수록 좀더 헌신  
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집행자세  
가 요구되는 것은 이들의 행태  
에서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 □ 연합통신 ('98. 10. 10)

### "2004년께부터 쌀자급 유지 힘들 듯"

#### 농림부 농정개혁 대토론회서 밝혀

(서울=연합) 李宇卓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李水金)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관계자와 농업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金正鎭 농림부 농정국장은 주제발표에서 "쌀 자급기반인 논 면적은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3만4천ha씩 감소됐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4년 쌀 자급유지를 위한 적정면적 1백10만ha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과 통일에 대비, 쌀 자급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국장은 특히 남북 농업협력문제에 언급, "국토통일 촉진이라는 대명제 아래 북한의 근본적인 농업생산력 증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제, "남북한간 상호보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연해주를 포함한 중국의 토지, 남한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해외농업 공동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曹國鉉 전농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농업관련 협동조합 개혁문제에 대해 "개별조합의 생존여부나 소속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동조합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농축협 통합 ▲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경제·지도 사업 분리 운영 등을 주장했다.

曹위원장은 또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농조),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 등 3개 기관의 통합문제에 대해 "농업기반관련 조직의 통폐합과 수세폐지는 농업희생과 식량자급을 위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한 뒤 "최근 농조와 농조연의 반발은 집단이기주의의 발호"라고 규정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협동조합 개혁, 농가부채, 유통 등 농정 현안을 놓고 관련 전문가들과 각 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별 토론회를 벌였다.

(끝)

독자칼럼

# 집단이기주의를 버리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닥친 태풍 '예니'로 인해 수확기 벼가 엎치고 덮쳐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농민들이 진심으로 반겼던 농업관련조직 총폐합에 대해 농조는 지난달 과천시에서 반대시위집회를 벌였다.

조합에는 조합장과 전화당번 아가씨만 남기고 미리 대접한 버스에 마지못해 풀려가는 듯한 농조 젊은 직원들의 뒷모습을 볼 때 농조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대통령이 직접 공포한 1백대 개혁실천 과제중의 하나인 농조·농조연·농진공외 통합을 반대하는 농조의 집단 시위집회로 일온것이 과연 무엇인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다 자란 고추와 사과·배 등 껍질부터 여름 내내 피땀 흘려가꾼 채소와 과일들이 수확기에 이르러 한 두차례 내리는 비와 뒤늦은 폭풍으로 인해 1년 농사를 망치는 예가 허다하

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천시위집회에 참석한 농조직원들은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상식이하의 행위를 저질렀다.

정부에서 농업관련기관 조직을 축소하여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올바른 정책에 집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너욕이 농촌일손이 크게 부족한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있을 농조가 정부시책을 외면하고 농업인을 선봉하여 상경한 것은 과연 농민을 위한 농조인가. 농조를 위한 농조인가. 분봉이 터질 뿐이다.

우리 전업농 연합회는 3개기관 통합을 강력히 지지한다. 농조는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집단이기주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통합공사로 거듭 태어나 미래 농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장동철 <전업농농남연합회회장>

## □ 연합통신 ('98. 10. 8)

### 진주 진산 농조 직무유기혐의 수사(속보)

(진주=연합) 池性욱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태풍때 진산농지개량조합 전 직원들이 농조통폐합 반대를 위한 서울집회에 참석, 관리부실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입힌 혐의(직무유기등)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8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진산농조(農組)禹모 조합장(55.진주시 상평동)과 鄭모 전무(55) 등 조합 관계자 9명을 소환해 태풍이 발령된 시점인데도 전 직원이 서울 집회에 참석한 과정 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이틀동안 千모씨(43.진주시 금산면) 등 태풍 내습 때 농경지 침수피해를 당한 농민 10명을 소환, 피해액과 피해를 입게 된 원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8일에도 농조 관계자와 농민들을 상대로 배수펌프 고장으로 배수가 되지 않은 점과 수로관리원들의 배수장 관리부실 등 정확한 침수원인을 조사,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7일 진산농조로부터 최근 발주한 공사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입찰당시 금품수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끝)

### “農組서 수문안달아 태풍피해 늘었다”

직원들 집회위해 상경  
수리시설 방치해 협수  
진주농민회등 보상요구

경남 일부지역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들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농지개량조항 동폐합 반대 집회'로 인해 태풍 피해가 늘었다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 농민회(회장 최운현)는 7일 "태풍 예니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농지개량조항 조항 직원은 물론 일선 수리 관리인, 기술자 등 상당수가 농지개량조항 동폐합 반대 집회에 참가한다며 상경한 것은 직무 유

기"라고 밝혔다.

농민회는 "뜰우가 쏟아지는데도 농조에서 수문을 닫지 않거나 설비를 돌보지 않아 진주시 대곡면 등지의 수확기에 접어들 수박과 배추밭 등이 침수돼 엄청난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역 보상△직무유기·와 관리부실에 대한 공개 사과△수리시설의 보수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진주 뿐 아니라 경남도내 각 지역 농민회는 농민회 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고 연대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농조의 서울 집회와 맞물린 태풍 피해가 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진주=김점돈기자>

manman@donga.com



## 진주 농지 침수 피해 농조 과실 수사 착수

### 농민회 보상요구 주장

속보=지난달 30일 제8호 태풍족우 당시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의 농조통·폐합 반대결의대회 참가로 저수지와 배수문관리가 안돼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는 농민들의 주장(본보 3일자 17면 보도)에 따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은 8일 진산농지개량조합의 공사발주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진주경찰서도 피해농민들과 농조관계자 등 20여명을 소환, 관리부실에 따른 침수피해 발생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은 7일 성명을 내고 "태풍 아니의 내습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

는 시점에 농조직원뿐 아니라 일선 수리관리인, 기술자들이 모두 농지개량조합 등폐합반대 집회에 참여키 위해 상경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히고 그에 따른 보상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태풍이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농조에서 수문을 닫지 않아 수확기에 접어든 수박과 배추 무영 고추 등 농작물들이 침수돼 수억원 어치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이에따라 △농민피해 전액보상 △직무유기, 관리부실에 대한 공개사과 △등회합에 찬성할 것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계획 수립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진주=최희수·김정관기자

hieu460@

# “태풍, 농작물 망치든 말든”

## 진산농지개량조합직원 구조조정 반대 집회 참가

### 배수문 관리 안돼 농경지 침수 피해...보상 요구

진주=최현식 기자

지난달 30일 제9호 태풍 애니의 영향으로 농경지 침수 등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산농지개량조합(조합장 우종표) 직원들이 정부의 농업관련단체 구조조정에 반발, 상경하는 바람에 배수문 등 관리가 되지 않아 진주 지역일대 농민들이 더욱 큰 피해를 봤다며 항의농성을 벌이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시와 농민들에 따르면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관련단체 통합에 반발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거 상경, 배수장 보편 등 관리가 안돼 제때에

물을 빼지 못해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봤다는 것.

농민들은 진주시 문산읍 영천감 일대와 수곡면 덕천감일대 1,000여ha의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도복 피해를 보았고 김천면 지내천일대 벼는 20여ha 시설하우스 20여동(5

ha)이 침수되고 금산면 남성배수장의 배수지연으로 벼는 등 10여ha가 침수되는 등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농조측은 “직원 47명 중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30명만 집회에 참가하고 17명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투입해 안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 집회참석 진산 農改組

### 직무유기협 의 수사

[진주] 속보=진주경찰서는 태풍 때 진산농지개량조합 전 직원이 농조통합을 반대를 위한 서울집회에 참석, 관리부실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혐의(직무유기 등)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8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진산농조(農組) 우모 조합장(55·진주시 삼평동)과 정모전무(55) 등 조합관계자 9명을 소관해 태풍이 발령된 시점인데도 전 직원이 서울 집회에 참석한 과정 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관련기사 17면>

## “농개조 집회참석 몽땅 상경 수문 못닫아 피해 더 컸다”

경남지역 농민들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농지개발조합 통과 반대 서울집회로 태풍피해가 늘어났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과 진주농민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태풍 '애니'의 내습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농지개발조합 통과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농조직원 뿐 아니라 일선 수리관리인, 기술자들이 모두 상경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농민회는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농조에서 수문을 닫지 않아 수확기에 접어든 수박과 배추, 우엉, 고추 등이 침수돼 수억원어치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폭우가 쏟아져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농민피해 전액보

상 △직무유기, 관리부실에 대한 공개사과 △통제할에 찬성할 것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 계획 수립 등 4개항의 요구문을 채택했다.

특히 경남도내 각 지역 농민회는 전국농민회에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송했으며 전국의 농민들과 연대해 법적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농조의 서울집회와 맞물린 태풍 피해가 법적문제로 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주=이병화기자

## 진산농개조 20명 소환

### 자검경, 관리부실 수사

속보= 지난달 30일 제9호 태풍 예니 북상때 진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진산농지개량조합원들의 상경부쟁으로 인한 관리부실이란 농민들의 주장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본지 2일자 22면 보도)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농지개량조합의 공사발주서 등 관련서류를 점검 검토하고 있으며 경남지방경찰청과 진주경찰서도 농민들과 진산

농조 관련자 20여명을 소환, 관리부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은 7일 성명을 내고 태풍 예니의 내습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농개조 직원들을 비롯한 일선 수리관리인, 기술자들이 동폐합 반대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두 상경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농민피해 전역보상과 공개사과, 수리시선에 대한 보수계획 수립 등 4개항의 요구문을 채택했다.

/진주=김진태기자/

## □ 연합통신 ('98. 10. 8)

### 농민들 농조에 태풍피해 보상 요구 통폐합 반대집회 上京 水門 안달아

(진주=연합) 池性昊기자 = 경남지역 농민들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농지개량조합 통폐합반대 서울집회로 태풍피해가 늘어났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과 진주농민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태풍 '애니'의 내습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농지개량조합 통폐합반대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농조직원뿐 아니라 일선 수리관리인, 기술자들이 모두 상경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농민회는 "태풍이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농조에서 수문을 닫지 않아 수확기에 접어든 수박과 배추, 우엉, 고추 등이 침수돼 수억원 어치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폭우가 쏟아져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농민피해 전액보상 ▲직무유기, 관리부실에 대한 공개사과 ▲통폐합에 찬성할 것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계획 수립등 4개항의 요구문을 채택했다.

특히 경남도내 각 지역 농민회는 전국농민회에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송했으며 전국의 농민들과 연대해 법적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농조의 서울집회와 맞물린 태풍 피해가 법적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끝)

“농조직원 집회가느라 물관리 능력 침수키웠다”

# ‘성난 농심’ 태풍피해 보상 목소리

태풍 ‘애니’ 상륙 때 농지개량조합과 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 및 수문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벼침수 등 농작물 피해를 가중시켰다며 각 지방 농민회가 잇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부안군 계화 농민들은 농지개량조합 임직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농조 통폐합 반대집회’에 참석하느라 태풍피해가 나기 시작한 뒤에야 이 지역 농수로 수문을 열어 모두 1600ha의 논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읍시 고부면 농민들은 익산시 방국토관리청이 자신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배수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신용고 가설공사를 위한 물막이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태풍 피해 초기 농조 직원들이 통폐합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두 자리를 떠났다”며 “특히 고부천의 고장난 수문 4개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고발도 불사하

겠다는 자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주농민회(회장 최운현)도 농지개량조합 임직원들이 통폐합 반대집회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수확기에 접어든 벼와 수박 배추 우영을 비롯한 고추 등 비닐하우스 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지역은 남강변 진산농조가 관리하는 진주시 집현면 신당마을 등 3곳, 대곡면 한실마을, 지수면 압현마을, 금산면 남성마을 등 2곳, 수곡면 등으로 농조 임직원 172명이 통폐합 반대집회에 참석하느라 수문관리인도 남기지 않은 채 거의 모두 자리를 비워 불어난 남강이 역류해 침수피해가 컸다는 것이다.

농민회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살길을 위해 물관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감독부서인 농림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농조는 수리시설 보수와 정비계획을 밝히고 통폐합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진주전주/김현태 임석규 기자

## “농경지 침수는 人災”

農組 수문조작 잘못 피해 확산... 보상 요구

【고령】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 수문을 제 때 닫지 않아 벼논이 침수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농민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령군 우곡면 아정리 아정들 농지경작 주민들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4백30여mm의 비가 내렸는데도 용수로 시설 관리들 맡고 있는 고령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 수문을 때 맞춰 닫지 않아 이 일대 벼는 60여cm가 물에 잠겼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74년 경지정리들 한 후 지난해까지 자체조직인 수리계가 아정들의 수리시설을 관리하였으며 그동안 비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다며 '지난 6월 농지개량조합이 시설물관리를 인수한 후 큰 피해가 발생한 만

큼, 농조가 이에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민 박태인씨(66)는 '폭우로 회전이 범람, 넘친 물이 양수로를 통해 아정들로 흘러드는데도 수문을 닫지않아 벼가 넘어진 채 물에 잠겼다'며 '이 때문에 벼에서 싹이 나고 일부는 싹어 수확률이 30~40% 줄었을 뿐만 아니라 미질도 떨어져 손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농지개량조합 관계자는 '용수로 수문을 작동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지만 농경지 침수의 더 큰 원인은 천재지변'이라고 설명하고 '농조는 피해를 보상할 규정도 제해도 없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kr〉

# □ 매일신문 ('98. 10. 7)

## 폐쇄배수장 방치 침수 농민들 피해보상 요구

폐쇄시킨 배수장을 통해 낙동강물이 역류,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등 팔짱을 낀고 있다.

구미 농지개발조합은 낙동강변 지역인 구미시 양호동에 지난해

새 펌프장을 설치한 후 증전에 운영하던 펌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지난 1일 새벽 배수로를 통해 낙동강물이 역류, 양호동과 치산들관리 침수됐다.

이날 사고로 양호동 주민들은 「농조에서 옛배수장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

에 수십만평의 특작물과 벼가 침수피해를 당했다. 며 1일과 2일 두차례 구미농조에 물러가 옛 배수장의 배수로를 파손시킨 이유와 농경지 침수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구미농조측은 「이번 사고는 폐쇄시킨 배수로들 통해 세굴(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면서 구미권의 물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역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 설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는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좀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올해 우리 농민들은 한여름의 폭염과 물난리의 고난을 딛고 황금들녘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9·15작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쌀 예상수확량을 생산목표량 3천3백94만석보다 1백70만석, 5%가 많은 3천5백64만석에 이르러 3년연속 풍작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다음날 태풍 '애니'가 곡창지대인 영호남을 강타했다. 전국적으로 벼도복 29만9천8백ha, 침관수 5만4백ha의 피해를 입어

쌀생산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농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농가부채대책도 좀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최종회의

의 경영난을 감안하면 금리인하가 불가능하다는 농·축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3일 8차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또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민들이 크게 기대했던 농정개혁은 기득

## 98년 한가위, 농심 그리고

를 가졌으나 상호금융 금리인하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동조합이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정부시책으로 상호금융 상환연기와 금리인하를 다뤄야 하며, 금리를 5%선까지 낮춰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입장, 조합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단위조합

권 세력의 반발과 조직 이기주의, 그리고 정부의 어정정한 태도로 좀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독자적인 개혁안이 마련됐으나 중앙회 통합문제와 이종조합간 합병 등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농·축·임·삼협 중앙회 각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10월중순까지 공동개혁안 제출시한을 연기하는 등 당초의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 이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농정조직 개편과 관련, 정부가 내세우는 수세폐지와 연

## 농정개혁

관된 농진공·농조·농조연의 통폐합문제도 농조측의 강력한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농조측은 자체 개혁안이 정부안보다 더 합리적이라면 2000년 1월 농업기관공사를 설립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결사 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같은 농업관련 기관·단체

개혁과 관련, 지역에서는 조직간의 갈등에서 파생된 분열과 대립의 분위기가 지역공동체로까지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석을 맞은 오늘 농심은 어렵게 이루어냈던 풍년현장이 '시름의 바다'로 변한 들녘을 바라보면서 망연 자실하고 있다. 이러한 농심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는 태풍 '애니'로 인한 피해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획기적 농가부채대책 마련과 함께 특히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개혁도 저물려 마무리해야 한다. 물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농사가 때가 있는 것처럼 개혁도 시기를 잃어버리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 특히 국민의 정부, 농정개혁의 실종위기를 걱정하는 농심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농조·농조연 노조 대규모 통합반대 장외집회 농민단체 “집단 이기주의” 비난

농진공·농조·농조연 등 3개 기관의 통합에 대해 농조와 농조연 노조가 지난달 30일 대규모 통합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장외로 나선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농조노조와 농조연노조는 지난달 30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노조원 등 1만여명이 참가, '농민조직 사수 전국 1백만 조합원 및 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해 통합을 철회하고 농

조자체개혁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황창주)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태풍 애니가 북상해 재해방지를 위한 물관리에 전념하는 것이 농조의 기본 의무에도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만을 위해 장외집회를 강행한 농조직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이어 정부에 대해 "농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

세를 가지고 개혁에 항거하는 신문광고와 집회 등 온갖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를 일삼은 농조와 농조연의 자금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비리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도 30일 성명을 발표, "태풍으로 비가 계속 오고 벼가 쓰러지는데 벼베기에 대비한 물관리는 핼개쳐 놓은채, 농조직원들이 농민들까지 현혹해 통합에 반대하



농조·농조연 노조가 지난달 30일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농민조직 사수 전국 1백만 조합원 및 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는 집회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 사건 자체가 농조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채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극단적 발호"라고 비난했다.

(이상길 기자)

## 대잠저수지 붕괴 “농조 책임”

### 수위조절·보수관리 소홀 “설득력”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잠저수지 붕괴 책임이 이를 관리하고 있는 포항농지개량조합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포항농조는 태풍 예니가 방향을 틀어 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상대 예보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저수지 수량을 조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발생 이전까지의 대잠저수지 저수율은 70%를 넘어선 30여만.

농조측이 태풍 진입에 대비해 지난달 29일 수위를 낮췄더라면 제방 붕괴는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 토목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농조측은 그러나 태풍의 직접 영향으로 포항지역에 시간 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질때까지도 수위조절은 커녕 현장 점검도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동지구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모 업체가 대잠저수지 제방 위에 대형 입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농조가 허락해준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농조는 이밖에 대잠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포항시와 매각 전차를 밝으면서 이곳 저수지에 대한 보수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붕괴 원인이 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차제에 용리민 숫자도 얼마 안되는 대잠저수지를 메워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중의기자】



# “수문관리 안돼 벼논침수”

진주 5개면 농개조직원 집단상경 마산진동 하천 구조물 철거 능력

진주 진산농지개량조합 직원들과 대의원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 관련단체 통합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과천으로 대거 상경, 이번 대풍 「애니」의 집중호우로 저수지와 배수문 관리가 안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며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진산농지개량조합과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남부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접어드는 등 집중호우로 도내 농경지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농조직원과 대의원 1백 71명 등 도내 15개 농지개량조합 소속 직원 1천5백여명이 관공버스

를 이용, 30일 오후 1시부터 과천 종합청사 잔디구장서 열린 「농지개량조합 자체 개혁방안 수용촉구 및 투쟁결의대회」에 참가차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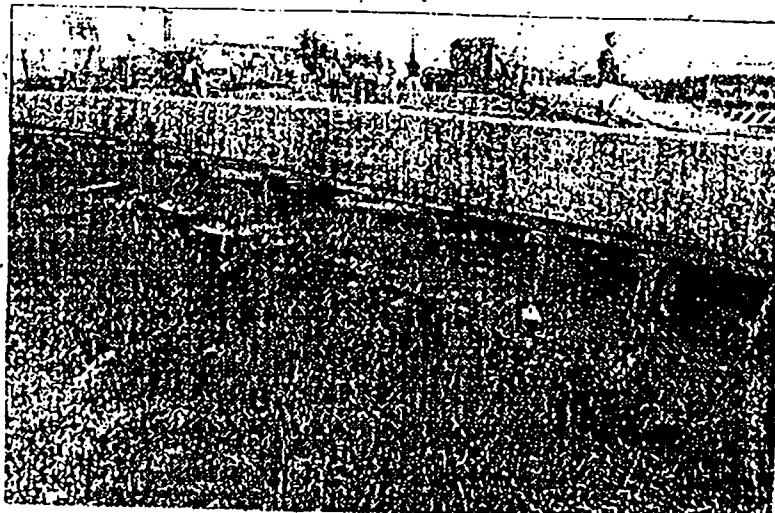
직원 50여명중 30여명이 대회를 위해 상경한 진산농지개량조합 관내의 경우 저수지 38개, 양배수장 32개, 보 3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진주시 문산을 영천강변의 배수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곳서만 5백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이번 폭우때 침수피해를 입은 진주시 수곡면, 금산면, 지수면 주민 1백여명과 진주농민회 등은 2일 오전 진산농개조를 방문,

농개조의 관리부실로 피해가 커졌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형의집회를 가지는 등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진주=김진태기자/

마산 진동 주민들이 공무원의 능력 대처로 하천 물이 넘쳐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태풍 애니로 인한 집중 호우로 침수가 예상돼 진동면 시가지와 광암 해수욕장을 잇는 향군교 다리 공사현장 아래에 있는 철골 구조물들을 철거해 「태풍천」의 물길을 터 줄 것을 경남도와 시공자인 (주)대이건설측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양측으로부터 모두 거부당했다.



마산 진동에 시공중인 향군교 다리의 철골구조물에 각종 쓰레기와 풀들이 걸려 쌓여 있다. 지난 폭우때 이 구조물이 철거되지 않아 물이 넘치는 바람에 가옥침수 등 피해를 냈다. /이준희기자/

결국 이날 오후 3시께 하천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 독을 넘어, 인근 제재소와 가옥들을 침수시켜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도와 대이건설측은 침수 30여분이 지나서야 다급히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는 소

동을 벌였다고 한다.

도 관계자는 「10여일전 콘크리트 작업으로 한달간의 양생기간이 되지 않아 지지 받침대인 철골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영만기자/

## □ 경남신문 ('98. 10. 16, 16면)

### 배수문 관리 잘못 농경지 침수

김해 진영 주호리 일대 1만여평 피해

김해시 진영읍 주호리 박경철씨(48) 등 주민들은 김해농지개발조합이 배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일대 1만여평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일 농민들에 따르면 태풍 「애니」 때 진영읍 주호리 웅성마을 안개꽃, 토마토, 배추, 무, 버섯 등 1만여평의 비닐하우스 및 버논이 침수된 것은 낙동강 소하천인 주천강 수문을 한림읍장소가 제때에 닫지 않는 등 관리 잘못으로 물이 역류해 발생했다는 것.

이 때문에 수확을 앞둔 안개꽃, 토마토, 버논에 1m20cm 정도의 빗물이 고인데다 이달말께 출하할 배추, 무 밭이 침수돼 6천만여원의 손실을 보게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주민들은 「이 일대는 비가 아무리 많이와도 배수관리만 제대로 하면 침수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농작물 피해보상은 물론, 체계적인 배수관리 대책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진영=김형섭기자/

# □ 국제신문 ('98. 10. 2, 18면)

## “배수문 관리안돼 큰 피해” 농민들 항의농성

### 농지조합 상경 파문확산

속보=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이 정부의 농업관련단체 구조조정에 반발해 대거 상경하는 바람에 배수문 관리가 안돼 태풍 예년의 피해를 크게 입었다며 경남지역 농민들이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진주시와 농민들에 따르면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관련단체 통합에 반발해 이날 과천에 대거 상경, 배수장 부 관리가 안돼 큰 태풍 피해를 입

었다는 것. 농민들은 진주시 문산읍 영천강 일대와 수곡면 덕천강 일대 1천여ha의 농경지가 침수된데 이어 집현면 지내천 일대 벼는 20ha와 시삽하우스 20여동(5ha)이 침수되고, 금산면 남성 배수장의 배수지연으로 벼는 등 10ha가 침수되는 등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김인수기자





## □ 연합통신 ('98. 10. 2)

### 태풍에 벼 25만2천ha 쓰러지거나 침수

#### 농림부 집계... 전남이 11만780ha로 最多

(서울=연합)金泰烈 기자= 농림부는 제9호 태풍 '애니'의 영향으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벼가 쓰러지거나 침수된 면적이 25만2천ha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시·도의 행정조사를 통해 집계된 이같은 피해면적은 올해 벼재배면적 1백5만3천ha의 23.9%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전쓰러짐 11만5천7백ha, 반쓰러짐 12만3백ha, 쓰러진 벼 침관수 1만6천ha로 구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만7천8백ha(완전쓰러짐 5만3천1백, 반쓰러짐 5만4천8백, 침수 9천8백ha)로 가장 많고 경남 5만2천5백ha, 전북 2만6천1백ha, 충남 2만3천7백ha 등으로 밝혀졌다.

농림부는 쓰러진 벼 일으켜 세우기에 공공근로사업 인력과 공익요원, 민방위대원, 작전에 지장이 없는 군인, 농협과 축협,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직원과 추석을 맞아 귀향하는 인력까지 동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20, 21일에도 농림부는 모두 32만6천7백여명을 동원해 비로 쓰러진 23만6천여ha 가운데 6천7백여ha의 벼를 일으켜 세웠으나 이번에는 벼가 다 자라 낱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벼를 다시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는 침수된 지역의 배수구를 정비하고 논둑을 군데군데 터 놓아 최대한 물을 빨리 빼고 수확기에 있는 벼를 서둘러 수확한후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기를 이용해 건조하도록 당부했다. (끝)

## □ 연합통신 ('98. 10. 2)

### 충남농조 농정조직 통합 반발 확산

#### "특정공기업 농진공 살리기위한 의도"

(충남종합=연합) 任俊宰.李殷坡기자 = 정부의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농정조직 통폐합 결정에 대한 충남도내 농지개량조합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보령농지개량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것은 농정조직의 효율성을 꾀하기보다는 특정 공기업인 농진공을 살리기 위한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서산농조도 이날 농림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농조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조연은 회원조합의 지도 및 지원사업을, 농진공은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등을 수행하는 등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어 정부의 '기능중복'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조합원들의 동의없는 통폐합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농조는 성명에서 "농민들의 자체 조직인 농조를 공기업인 농어촌진흥공사와 통폐합하는 것은 민주화, 자율화, 전문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식량자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조직을 통폐합하기보다는 각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태안농조 역시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각 조직에 대한 현지 실사나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즉흥적인 발상"이라며 "성격이 다른 조직을 인위적으로 한데 묶는 것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9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 4차 농조, 농조연, 농진공 통합추진 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개 기관을 통합, '농업기반공사'를 신설키로 확정했다.

(끝)

□ 서울신문 ('98. 10. 2, 23면)

## 농정조직 통합 갈등 확산

農組·農組聯노조 정부청사앞서 반대시위

경실련등 시민·농민단체선 즉각 개혁 촉구

농정조직 통합을 둘러싼 농업관련 기관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통합대상인 농지개발조합(농조)과 농지개발조합연합회(농조연)가 통합에 반대하며 대대적인 광고전과 집단시위를 통해 실력행사에 나섰고, 이에 시민·농민단체들은 이들을 강력 비난하며 농정조직의 즉각 통합을 촉구했다.

농조 및 농조연 노동조합, '전국

100만 농민조합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광장에서 대규모 집단시위를 갖고 정부의 통합방침을 맹렬히 비난했다.

전국의 조합원과 농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농조연 측은 "정부의 농정조직 통합안은 농업인의 자치권과 수리권을 박탈하고 농민 자조조직의 권익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개악"이라며 "조합

원의 수리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농조 자체의 개혁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실력행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합방안은 대세로 굳어가는 양상이다. 최대 농민조직인 전국농민단체연합회(전농)가 이들의 주장을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규정지며 통합을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대표적인 시민단체들도 이에 가세하는 양상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통합반대 세력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자칫 통합안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변질되지 않을까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陳環鎬기자 kyounggho@seoul.co.kr〉

농지조합 폭우 태풍 밀려오는 데 상경

# 저수지·배수문 관리 허점

## 경남 15개 조합 통폐합 반발 대거 서울로 진주 영천강·덕천강 범람 농경지 피해가중

태풍 '애니'가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내고 있는 가운데 농지개량조합 직원들과 대의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관련단체 통합에 반발, 「농지개량조합자체개혁방안 수용촉구 및 투쟁결의대회」 참가차 과천으로 대거 상경. 저수지와 배수문 관리가 안돼 망령이 되고 있다. 진주시 진산농지개량조합과 도내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남부지방이 태풍영향권에 접어드는 등 집중호우로 도내 농경지가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진산농조 직원

과 대의원 171명 등 경남도내 15개 농지개량조합 소속 직원 1천5백여 명이 관광버스를 이용, 30일 오후 1시부터 과천종합청사 잔디구장에서 열린 「농지개량조합 자체개혁방안 수용촉구 및 투쟁결의대회」에 참가차 떠났다. 이 때문에 저수지와 배수문 관리 인원이 없어 저수지와 하천의 제방을 열어놓지 않는 바람에 민수위를 넘은 각 저수지가 빗물유량 분산역할을 못해내 농경지 침수피해들 가중시켰다.

직원 50여명중 30여명이 대회를 위해 떠난 진산농지개량조합 관내의 경우 저수지 38개, 양배수장 32개, 보 3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진주시 문산읍 관내 영천강변의 배수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곳에서만 500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곳곳에 큰 피해를 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지리산~산청~진양호로 이어지는 덕천강도 한꺼번에 빗물이 쏟아져 범람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이날 대회는 정부가 농업관련단체의 구조조정 의 일환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합해 농업기반개발공사를 신설키로 하자 이를 저지키 위해 개최됐다. /김인수기자

□ 경남신문 ('98. 10. 1, 16면)

## “배수문 관리 잘못 농경지 7만여평 침수”

창녕 남지주민 시설하우스등 피해 호소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50여가  
구 주민들은 응지개량조합이 배  
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일대 7만여평의 농경지가 침  
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이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남지읍 남지리 117일대 5만여평  
의 벼논과 2만여평의 비닐하우스  
가 침수된 것은 계성천으로 배출  
하는 수문을 남지·영산농조출장  
소가 서로 관리를 미루는 등 제

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  
는 것.

이 때문에 수확을 앞둔 벼논에  
는 1m이상의 빗물이 고인데다  
절반이상의 벼가 넘어지고 이달  
하순께부터 출하된 2만여평의  
오이를 비롯한 고추 토마토 등의  
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들 있었  
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이 일대의  
농경지는 50mm의 비만 와도 침수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인데 농조

와 행정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뤄  
이같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  
며 체계적인 배수관리 등이 시급  
하다고 지적했다.

농조등 농정조직 통합 반대 집회

# 「장외투쟁」벼랑끝 선택

## 정부 「반개혁세력」 몰아치기 갈등심화 예상

30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앞 광장과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농지개발조합(농조)과 농지개발조합연합회(농조연) 노동조합 주도로 열린 통합반대 집회는 이른바 '농정조직 통합 반대파'들의 움직임이 새로운 단계로 비화됐음을 말해준다.

그동안 이들은 농림부가 추진중인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농조-농조연 등 통합방안에 대해 '통합반대 서명운동'과 '통합반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집중 홍보해 왔다. 특히 농조 등의 노조는 자체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등 이른바 '반개혁세력'으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3개기관 통합추진위 등의 대응수위가 오히려 높아져 농조 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조치 등이 취해졌다. 29일에는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들이 농정조직의 즉각적인 통합과 통합 반대파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정부

에 촉구하고 나서는 등 주변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전개돼 왔다.

이런 과정으로 미루어 이날 집회는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막한 불가피한 처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농림부 당국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당초 통합 반대파들이 잠담한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참가인원이 예상에 크게 못미쳐(과천 집회 3만명 이상 참여 예상에 1만5천여명 참가) 통합 반대파들이 '전국 1백만 농민조합원회'를 내세우는 등 '다수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판측들은 이에 대해 이날 나쁜 기상여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농림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요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농림부는 며칠전부터 이날 집회의 호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찰 및 각 시도 관계자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처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또 29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고비로 수세폐지와 농정조직 통합이라는 개혁과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욱 고조됐다고 판단. 앞으로 통합 반대 움직임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농조 경영의 실태와 비리 의혹을 집중

부각시켜 통합 반대파들을 '밥그릇'에 집착하는 '반개혁, 세력'으로 인식시킨 뒤 예정된 수순에 따라 3개 기관 통합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농림부와 이에 맞서는 농조와 농조연내 일부 통합반대 세력간 갈등은 앞으로도 더욱 첨예화될 것이라는 것이 농업계의 관측이다.

### “農組등 집회참석은 농민우롱 처사”

#### 農振公, 상경집회 반박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등 3개기관·동회합과 관련, 농조와 농조연·노조 및 농민조합원등이 30일·과천정부청사앞 집회를 가진데 대해 농어촌진흥공사도지사는 “농조와 농조연의 과천집회는 대다수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농진공도지사는 30일, “농민기예다 태풍 복상으로 추수할 작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내 농조 직원들이 업무를 전폐한채 과천 집회에 참석한 것이 진실로 농민을 위한 것인지 의아하다”며 “이같은 집단이기주의가 일부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완경>

□ 한국농어민신문 ('98. 10. 1, 12면)

**“농조 - 농조연, 조직 통폐합 적극 동참을”** 전북도내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정부의 농진공·농조·농조연 등 3개기관의 농업기반개발공사(가칭) 통폐합 추진에 농조와 농조연이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도농업경영인연합회를 비롯 전농전북도연맹, 4-H연맹전북도지부, 전북농촌지도자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등 도내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28일 전북도연합회 사무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조, 농진공, 농조연 등 3개기관의 통폐합이야말로 생산기반의 강화와 함께 확고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과제”라며 “농조와 농조연은 통폐합 반대 입장과 활동을 중단하고 통폐합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 “농정조직도 개혁필요”

## 공감 확산

『농촌에는 농부보다 농업관련 단체 종사자가 더 많다』

굵직한 농업관련단체만해도 농협 축협 임협 농진공 농조 농조연등이 있다.

농민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왜 농업관련 조직원은 오히려 늘고 있는지의문이 아닐수 없다.

이같은 의문에대한 해답으로 정부가 농정개혁차원에서 우선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구한말 녹두장군 전봉준이 수세폐지를 요구하며 동학혁명을 일으킨 이래 농조개혁문제는 농정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을 대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아 농민들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조, 농조연, 농진공의 통합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즉 농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는 대세론의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이 작업은 현정부 개혁의 시금석이기도 한다.

### 농업관련 조직 통폐합 어떻게

#### 농조-농진공-농조연 기능중복 심각

#### “파행운영등 국고만 탕진” 여론높아

#### “민간기구 공기업화 시대역행” 반발도

농조와 농진공은 농정지원기관중에서 기능중복과 조직비대화가 가장 두드러진 부문이다. 이들 기관은 비슷한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낭비와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돼 왔다. 그동안 농업부문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농촌과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못한 것은 농업지원조직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인력구조에도 원인이 있다.

농림부의 개혁안은 3개기관을 통폐합해서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토록 하고 있다. 현재 7,174명인 직원수를 1,200여명 줄인후 통합후 2001년까지 5,500명수준으로 감축해나간다는 것이다. 조직은 본부-도사무소-지역사무소의 3단계 공사조직으로 하고 지역사무소는 현행 188개에서 80개

로 감축한다.

3개기관 통합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조성우(趙成禹)전농 부의장은 “3개기관 통폐합은 시대적 요청이고 정부의 농정개혁의지를 시험하는 과업이다. 통합에 따른 예산절약분은 모두 농민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개편안에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농조과 농조연은 “3개기관 통폐합이 아니고 사실상 농진공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마당에 민간조직체를 공기업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물관리체계를 보면 저수지 용수·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조사·설계는 농진공, 이들의 유지관리는 농조와 농조연이 담당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제는 똑같은 일을 농번기에는 농조가, 농한기에는 농진공이 나눠맡고 있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농조운영의 문제점은 3개기관의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운영부실, 조합간부의 비리 등을 들수 있다. 농조는 조합비 보전차원에서 국고에서 매년 1,000억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으로 인해 다수조합이 파산 등 경영위기에 직면해있다.

전국 105개 농조중 자립농조는 10개에 불과하고 95개 농조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운영경비 부족으로 예산편성조차 어려운 조합이 20개, 직원퇴직금도 줄수 없는 조합이 31개에 이르고 있다.

둘째, 농업생산기반정비 기능을 3개기관이 나눠 수행, 비효율성이 엄청나다. 기본조사, 설계, 감리 등의 업무는 농조연과 농진공이 경쟁관계에 있으며 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사업규모에 따라 농조와 농진공이 분담하고 있다.

셋째, 88년 조합장선출제가 도입된



경실련·한농연·전농 등 시민, 농민단체 소속회원들이 29일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조·농조연·농진공 등 3개 기관의 즉각적인 통합을 촉구했다.

이후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대의원매수 등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출직 조합장이 발주공사의 입찰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있다. 97년 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대의원매수 등 선거부정으로 사법처리된 경우가 전국적으로 수십건에 달한다.

3개기관 통합에 따라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반사이익은 상당하다.

물관리에 있어 광역단위 종합관리 운영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또 농번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조와 농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진공의 통합으로 인력이 20~30%가 줄어

들어 조직·인력의 군살이 빠진다. 경비절감액수만큼 농조조합비 감면을 추진해 농민들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게 된다.

농진공의 전문인력과 농조의 현장기술력 결합으로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양질의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최근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농촌환경오염에 대해 농업용수의 과학적 관리와 수질개선을 통해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3개 기관의 통폐합이 시대적요청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 농민들은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

【연성주 기자】

## “年경비 1,000억 절감 농민에 양질서비스”

찬성

權光植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3개기관의 통합도 조직적

인 반대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을 반대하는 쪽은 일부 농지개량조합장, 대의원, 노조대표 등이다. 이들은 농조부실운영에 책임을 통감하고 개혁에 협조해야 함에도 기득권유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개혁이 일부 기득권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정개혁은 물론 국가 전체적인 개혁프로그램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IMF체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련의 개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우리의 장래가 달려있다.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각계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평가분석을 거쳐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의 유사중복조직에 대한 통폐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3개기관 통합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 우선 방만한 유사중복기능과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인력이 20~30% 감축된다. 이로 인해 절감되는 700억~1,000억원으로 농민과 국고부담 경

감이 가능하다.

현재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진공과 농조의 전문인력과 현장관리 경험이 결합돼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양질의 수리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추진하는 시너지효과로 농민은 지금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통합기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해외시장개척과 통일농정에 대비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와 연계된 종합적인 지역개발기능을 가짐으로써 농촌의

## □ 연합통신 ('98. 8. 29, 7면)

### 소규모 합병 전국농조 80여개로 조정

(서울=연합) 金泰烈기자= 농림부는 28일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와 농지개량조합(농조),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를 통합하기 위한 전단계로 소규모 농조 간의 합병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합병대상 농조는 설립기준(수혜면적 3천ha미만)에 미달되는 농조 39개로 이 가운데 30여개 농조는 흡수통합 과정을 거치게 돼 전국의 농조는 현재의 1백5개에서 80여개로 줄어든다.

기준미달로 다른 조합에 합병될 농조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이 7개, 강원 6개, 전남 5개, 충남·북과 경남 각각 3개, 경북과 대구지역 2개 등이다.

농림부는 이날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농업생산기반 관련조직의 정비를 위한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끝)

## 농지조합등 3개 기관 1천300여명 줄인다

### 농업기반공사 2000년 설립

농림부는 28일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산하기관을 통합, 내년말까지 1천3백여명의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또 이들 3개기관을 합쳐 자본금 5조원 규모의 농업기반공사(가칭)를 오는 2000년 설립, 운영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날 농업생산 기반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구조조정및 농업기반공사 설립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심의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업기반공사법을 내달말까지 확정,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조 농조연

농진공의 슬림화를 위해 3개기관 임직원 7천1백74명중 15~20%정도를 감원키로 했다.

기관별 감원비율은 농조와 농조연이 20%이며 농진공은 15%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농조는 8백20여명, 농조연은 1백30여명, 농진공은 4백여명씩의 감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또 전국 1백5개 농지개량조합중 조합법 61조상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조합 39개를 합병명령을 통해 강제 통합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신설될 농업기반공사는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업생산기반조성 농촌지역종합개발 등 농업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원 기자 dadad@

● 東亞日報 <98. 8.12>

**농진공-농조통합 꼭 성사돼야**  
조봉희(한국농업경영인중앙聯 정책부회장)

11일자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통합을 재고해야 한다는 장재우 전북대학교수의 '발언대'는 현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농진공이 대규모 간척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등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 농림부는 통합을 위해 현행 7천1백74명을 5천5백명선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면 1천6백74명의 인원이 줄고 매년 5백37억여원이

절감된다. 그런데도 7천명이상의 거대 국영 기업이 탄생한다고 예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재 3분의1에 달하는 31개 농조가 정부의 막대한 보조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실위기에 있다. 그러면서도 단 1개소만 경영개선을 위해 통합되는 등 지구노력이 미미한 것을 볼 때 농진공과 농조의 통합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 水稅 80년만에 없어진다

## 빠르면 내년에 농조·농진공·농개조 통폐합 추진

전체 농민들의 숙원인 수세(水稅)제도 폐지가 빠르면 내년 중에, 늦어도 2000년에는 이뤄진다.

1917년 일제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지 80여년만이다. 과거 대표적인 농민 수탈책 중 하나로 그동안 꾸준히 폐지 주장이 제기됐었다. 조선시대에는 공식적인 제도는 없었지만 탐관오리들이 마을의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이용한다는 빌미로 물값을 물렸다.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19일 '105년 전 동학농민혁명의 촉발제가 되는 등 수세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이어

져 내려오고 있다'며 '과거 정권이 하지 못했던 수세 폐지를 국민의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리사업을 담당하며 수세를 받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통폐합되면 연간 600억~9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든다"며 "그럴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농민들로부터 해마다 거둬들이는 360억여원의 수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기획예산위 등에서 세기관의 통폐합 일정을 2000년 1월로 잡고 있지만 내년 중으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140만 농가 중 93만여 가구가 농지개량조합에 가입돼 있다. 이들이 내는 수세(조합비)는 가구당 평균 4만원씩 연간 360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농가들은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도 강제로 '용리(鰥利·혜택을 입는다는 뜻)구역'에 편입돼 수세를 강제로 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치수(治水)사업은 국가사업이며, 수리시설은 사회간접자본으로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전국농민회총

연맹 등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87~89년 전국적으로 강력한 수세폐지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었다.

수세의 변천사 일제가 군량미 조달 등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1906년 제정한 '수리조합조례'에서 비롯됐

다.

이후 1917년 수리조합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10a(300명)당 비 26kg을 세금으로 징수. 농민들의 허리를 휘게 했다. 이는 87년까지 계속돼 왔으나 농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쳐 88년 10kg, 89년 5kg 등으로 줄어들었다.

96년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면서 현물대신 10a당 현금 6,000원을 거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불가상승률을 감안해 지역 별로 일정 액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돼있다.

〈朴恩鎭기자 unopark@seoul.co.kr〉

# “24개 農改組 통합해야”

감사원, 농림부에 권고

감사원은 정부의 1백 5개 농지개발조합 가운데 24개 조합의 통합을 권고하는 해산

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고도지방농림청의 통괄을 권고하는 등 농림부의 구조조정 업무에 적극 나설 것을 농림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농림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지개발조합연합회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46개이며, 이중 도서(島嶼)지역조합 등 22개 조합을 제외한 24개

조합은 농업생산 기반이 실용지관리보다 예치금 관리에만 치중하는 등 통합 필요성이 높기 것으로 지적됐다. 농림부는 지난 96년 상반기까지 기준 미달 조합을 통합할 방침이었는데, 개량조합연합회를 개설했다. <鄭權鉉기자·khjung@chosun.com>

□ 한겨레신문 ('98. 7. 9, 7면)

# 농지개량조합 90여년만에 '퇴출'

1906년 수리조합이란 이름으로 출발해 지금까지 존속해 온 농지개량조합이 90여년만에 완전히 사라진다. 농림부는 8월 2000년 1월까지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농지개량조합(농조)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를 완전 통폐합해 '농업기반개발공사' (가칭)를 발족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 조직의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 농진공과 통폐합 농업기반개발공사로 농조 조직적 반발...농민단체선 "환영"



이 방안은 통폐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 99년 1월까지 농진공과 농조연의 인원을 20% 감축하고, 농조는 소규모 농조의 합병 등 자체 구조 조정을 유도해 3개기관 완전해체→통폐합→새 공사 설립의 방법으로 통합작업을 마무리짓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달 안에 학계 농업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8월말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도 모두 끝내기로 했다. 이 방안은 사실상 농진공이 나머지 두 기관을 흡수하는 방식이어서 민간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농조와 농조연은 기능만 남고 완전히 사라진다.

◇ 배경=농진공 지사 및 시·군 지부(92개) 농조연 지회(8개) 농조(105개)등 비슷한 기능을 가진 농

업 관련 기관이 지나치게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여론이 강했다.

특히 전국의 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조합비(수세)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농조는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전국 105개 조합중 95개 조합이 국고보조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부실하다.

또 많은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95~96년 발주공사 263건중 65.5%가 제한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조합장이 각종 공사의 이권에 개입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 농조와 농민단체 움직임=농조는 정부의 통폐합 발표가 나오자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일방적으로 수세를 인상하는 등 각종 횡포를 일삼고 있는 농조의 폐지는 당연한 조치"라며 통폐합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수금 의장은 "정부가 부실기관을 계속 방치할 땐 결국 선량한 농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된다"며 "정부는 어떤 압력에도 밀리지 말고 강력하게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망=농림부의 통폐합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농림부 김동태 차관은 "더이상 정부가 약하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며 부실기관 정리차원에서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등 각종 개혁정책과 맞물려 3개기관 통폐합의 성과 여부는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함석진 기자



## 농진공·農組聯·농조 1개 기구로 통·폐합

‘농업기반개발공사’ 2000년 발족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 농지개량조합(농조)이 통폐합돼 「농업기반개발공사」(가칭)로 발족된다.

농림부는 8일 농정개혁위원회를 열어 농진공·농조연·농조 등 3개 기관을 통폐합해 2000년 1월부터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내년 10월까지 1단계로 농진공과 농조연의 인원을 20% 감축하고 농조는 소규모 농조의 합병, 인력감축 등 기관별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2단계로 이들 기관 및 단체를 해체한 후 2000년 1월부터 「농업기반개발공사」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내년부터 합병·인원감축  
기능중복등 비효율 해소  
예산절감·농민부담 줄듯  
農組 ‘통합반대’ 마찰예상**

농림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통합 관련 단체를 비롯해 학계, 농업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실무기획단을 두어 내달말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 및 단체는 ▲기능의 중복 및 비효율 ▲농업인구에 비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과다 ▲수리관리 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과 수질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농림부는 통폐합이 실현되면 상당 수준의 운영경비와 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의 절감으로 농민들의 조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농조는 이날 통폐합에 반대, 조합원 1백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통폐합 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홍인표기자

# 농진공·농지조합 통폐합

## 업무중복 예산집행 효율성 떨어져

농어촌 생산기반정비사업체인 농어촌진흥공사와 전국의 1백3개 농지개량조합이 통폐합된다.

26일 농림부 및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농지개량조합 시·군지부를 농어촌진흥공사의 75개 시·군지부에 통합시키기로 확정했다. 또 농지개량조합의 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해온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시·도지사는 농어촌진흥공사 지사 및 사업단에 통합, 농업생산통합기술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들 기관의 통폐합에 나선 것은 업무상 기능이 중복돼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농진공은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 업무들, 농지조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발 및 관리를 맡고있다. 특히 농지조합은 전국 1백5개 농지개량조합의 대다수가 재정구조가 극히 취약, 정부가 지난해에도 운영경비로

만 1천1백17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9백17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업예산이 낭비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왔다. 농지조합은 농민이 수세로 내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나 농업생산 및 경작지감소로 자체수익이 매년 줄고있다. 현재와 같은 운영체계를 유지할 경우 수년내 파산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김정아 기자 jackie@